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기록정보서비스로서의  
기록물 편연(編研)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 전공  
윤여진

## 국문초록

기록물 보존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록물의 공개와 활용이다. 서양의 기록학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기록물을 제공하는 아키비스트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향한다. 반면 중국은 아키비스트가 적극적으로 기록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활동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국 당안관리 만의 독특한 활동인 ‘편연(編研)’을 소개한다. 편연이란 기록물 담당자가 소장 기록물을 기초로 편집과 연구를 통해 출판되는 기록 정보이며, 적극적이면서 과학적으로 그리고 계통적으로 대중들에게 기록물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기록 정보서비스이다.

그러나 편연으로 인해 당안이 의도적으로 편집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 중국의 당안관은 당안을 공개하는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당안에 대해 원천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편연은 공개 대상의 제한, 비공개 당안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을 보완하기 위해 편연 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는 당안’을 공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중국의 이러한 폐해를 반면교사 삼아 편연을 국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연은 효과적인 기록물의 공개와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아키비스트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선 편연에 관한 인식을 살피기 위해 국내와 중국의 기록학 개론서, 교과과정, 기록관리 법령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편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기위해 중국의 ‘베이징시 당안관’과 ‘국가기록원’의 사례를 비교하였다. 분석한 결과 중국과 한국은 편연에 관한 인식과 실제 적용 사례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중국의 편연은 기록물을 편찬하던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록물 편찬의 전통이 사회주의체제 속에서 구소련의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은 기록물 편찬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그 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으며 전통이 단절되었다. 가치 있는 기록물을 더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고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편연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편연을 제도화하고, 기록학 교육과정상에 편연을 편성하여 아키비스트의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양성된 아키비스트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각 공공기관에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기록정보서비스, 기록물 활용, 당안, 당안 편연, 아키비스트의 역할  
**학 번:** 2011-23121

## 목 차

1.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
2) 선행연구 .....	4
2. 기록물의 편연(編研)에 대한 인식 .....	8
1) 편연의 정의 .....	8
2) 기록학 개론서와 교과과정에 나타난 편연에 대한 인식 .....	13
3) 중국의 기록학 개론서와 교과과정에 나타난 편연 인식 .....	22
3. 중국의 당안 관리와 편연 .....	27
1) 당안학의 역사와 편연 .....	27
2) 당안 관리 규정 중 편연 .....	29
3) 『베이징 당안 사료(北京檔案史料)』 .....	34
4. 한국의 기록물관리와 기록정보서비스 .....	41
1) 기록관리 제도와 기록관리학의 도입 .....	41
2)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서비스 .....	46
5. 결론 .....	61
참고문헌 .....	63

## 표 목차

<표1> 기록학 개론서 목차 비교 .....	16
<표2> 기록관리학 영역별 교육과목 .....	18
<표3> 중국 대표 당안관리학 교육기관의 개설과목 (학부과정) .....	25
<표4> 「당안법」의 주요구성 .....	30
<표5> 『베이징 당안 사료』 특집호와 일반호 .....	38
<표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구성 .....	47

## 그림 목차

<그림1> 국가기록원 조직도 .....	52
<그림2> 나라기록 포털 기록정보 콘텐츠 - 독도 .....	56
<그림3> 일제문서해제-임정편 과 해외수집기록물 해제-일본편Ⅱ .....	57

# 1.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국내 기록관리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록물의 생산과 폐기에 있어 투명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였고,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인 기록연구사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기록연구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관도 생겨났으며 국가기록물 전문 보존 시설로써 나라기록관을 건립하고 나라기록포털을 열어 기록정보서비스도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록연구사는 아직도 모든 곳에 완벽히 배치되지 않았고, 기록물을 폐기하기 위해 기록연구사를 뽑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공기관은 기록연구사 채용에 소극적이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나라기록관이 건립되었지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며, 지방에 흩어져 있는 기록물의 공개와 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록의 공개와 활용에 있다. 하지만 나라기록관, 기록정보센터, 역사기록관에서 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조상 땅 찾기에 혈안이 된 일부의 사람들뿐이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공 기록물은 이러한 일부의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의미 있는 기록들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그것의 의미를 함께 공유할 때 기록관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기록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활용하는 것을 누가 담당해야 하는 것인가. 이처럼 기록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키비스트들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SAA 용어집에 따르면 아키비스트(Archivist)란 기록의 진본성과 맥락을 유지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출처주의, 원질서 존중의 원칙, 그리고 집합적 단위의 통제라는 원칙에 따라 지속적 가치(enduring value)를 지닌 기록을



평가, 수집, 정리, 기술(記述), 보존, 검색 제공 등의 책임을 지닌 사람을 뜻한다.<sup>1)</sup> 국내 법률에서는 이처럼 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인력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라 칭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격<sup>2)</sup>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들이 과연 기록물의 공개와 활용을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기록물의 공개와 활용을 위해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이 연구가 출발하였다.

법률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의 폐기가 반드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고만 한다. 그리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자격과 배치 기준만을 정하고 있다.<sup>3)</sup> 법률에서 이와 같이 정하고 있어 기록물 폐기를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뽑는다는 말이 나오는게 이상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물을 폐기하기 위해 양성되는가?

중국에서는 기록물의 ‘편연(編研)’이라는 개념이 기록물 관리의 일환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편연이란 기록물 담당자가 소장 기록물을 기초로 편집과 연구를 통해 출판하는 기록물 정보이며, 적극적이면서 과학적으로 그리고 계통적으로 사회 각 방면에 기록물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기록 서비스이다. 편연에서의 연(研)이라는 것은 당안(檔案)<sup>4)</sup>의 내용을 연

1) Richard Pearce-Moses,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Archival Fundamentals SeriesII』, Chicago:SAA, 2005, p.33.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8조 1항.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4) 과거와 현재의 국가기구, 사회조직, 개인이 종사하는 정치, 군사,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종교 등의 활동에서 직접 형성되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보존 가치가 있는 각종, 문자, 도표,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역사 기록. 「중화인민공화국당안법」 제2조. 당(檔)은 횡으로 놓아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게 만든 시령을 말한다. 안(案)은 작은 탁자류를 말하는데 이 말의 범위가 확대·발전하여 하나의 일을 처리한 관련 문서를 ‘일안(一案)’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뒷날 이 일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당(檔, 시령)위에 올려 놓아 보존하였다. ‘당(檔)’과 ‘안(案)’ 두 글자가 합쳐져서 ‘당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 졌고, 그 의미와 사용범위가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

구하는 것이고, ‘편(編)’은 ‘연(研)’의 심화 가공의 의미라는 것이다. 즉, ‘편(編)’속에 ‘연(研)’이 있어 ‘편연’으로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sup>5)</sup>

편연에서 연(研)의 의미는 역사가의 역사 연구와는 구별된다. 역사가는 기록물을 직접 검색하여 기록물의 존재를 확인하고, 찾아낸 기록물로 혹은 아키비스트가 제공하는 편연 성과물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아키비스트는 역사가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대중을 독자로 생각하고 기록을 분류, 정리, 연구하여 편연 성과물을 생산한다. 역사가와 아키비스트의 연(研)은 차이가 있고 기록의 편연은 아키비스트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편연을 기록물관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의 한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각급 당안관(檔案館)이 편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법률로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당안관은 실제로 편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각급 당안관 혹은 당안실에서 생산된 당안 편연 성과물은 당안 원본과 동등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이용자들이 직접 당안을 소장한 당안관에 가서 당안을 열람해야하는 수고를 덜어 주었다. 편연 성과물이 각 공공기관이나 기층 당안관 그리고 도서관 등지에 비치되어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편연을 통해 도서와 달리 유일성을 지닌 기록물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편연의 기능은 잊혀질 수 있는 기록을 새롭게 꺼내어 정보 자원(‘死檔案’變成‘活信息’)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다. 편연은 당안의 가치를 더 높이 구현하고, 당안의 영향을 확대시켜 당안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sup>6)</sup>

그러나 편연은 이러한 장점만 가진 것은 아니다. 중국의 당안관은 당안을 공개하는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당안에 대해 원천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편연은 공개 대상의 제한, 비공개 당안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을 보완하기 위해 편연 활동

---

5) 陳智爲, 鄧紹興, 劉越男 編著, 『檔案管理學概論』,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8, pp.343~346.

6) 徐光远, 「档案编研工作的内容和意义」, 『华章』, 2012年第23期, p.303.

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는 당안’을 공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당이 기록물 정보를 장악하여 정보의 강자 위치에 있어 공개할 기록과 공개하지 않을 기록을 의도적으로 선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편연 성과물에서 기록 정보의 내용을 수정, 변화시키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편연 제도를 받아들인다면 기록의 공개와 활용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편연의 역기능과 순기능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이 편연을 당 선전의 수단으로 여겼던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는 한편, 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공개할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비공개 기록을 가능하면 줄이며 무엇보다도 편연 시 원본기록의 정보를 수정, 가공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편연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가진 편연이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된다면 기록정보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이 이처럼 편연을 중요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국내에서는 편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중국과 국내의 편연 활동을 비교하고, 앞으로 국내 기록관리에서는 편연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기록 관련 기본서와 교육과정을 보며 국내와 중국의 기록물 편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중국의 당안 편연을 규정하는 법률과 베이징 당안관의 실제 편연을 분석하여 중국의 실제 편연에 대해 볼 것이다. 4장에서는 국내의 법률과 국가기록원에서 하는 편연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분석하여 국내와 중국의 차이점을 비교하려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와 중국의 논문을 토대로 문헌연구를 하였고, 실제 편연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편연관련 법령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편연 성과물을 보기 위해 중국과 국내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베이징시 당안관과 국가기록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와 함께 『베이징 당안 사료』를 실제로 보고 분석하였다.

## 2) 선행연구

이전의 연구에서는 주로 기록물의 공개와 활용에 있어 기록물관리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를 권장하였다. 아키비스트의 역할로서 구체적으로 기록물의 편연, 즉 적극적인 기록물의 공개와 활용을 주장한 연구는 없었다. 아키비스트의 본질적 임무를 기록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젠킨슨(Jenkinson. H.)은 아키비스트의 주된 책임은 기록이 가진 특성들을 완전하게 보전하고 지켜내는 것이며, 이것이 보장된 후 이용자들의 기록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sup>7)</sup> 쉘렌버그(Schellenburg. T.) 역시 그의 책 『현대 기록학 개론』 17장에서 기록정보 서비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기록의 대중적이고 폭넓은 활용을 도모하기보다는 기록 이용에 대한 절차나 제한을 분명히 함으로서 기록이 오용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도록 강조하고 있다.<sup>8)</sup> 그는 아키비스트의 일차적 임무는 기록의 보존이고, 기록의 활용은 이차적 의무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기록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하였다.

푸(Pugh. M)는 기록 정보 이용을 위해 지적, 법적, 물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록관은 이용자의 지적접근을 위해 기록관에 관한 정보, 소장물에 관한 정보, 소장물에서 추출한 정보, 기록물 생산자에 관한 정보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접근을 위해 저작권, 프라이버시, 보안 등 관련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물리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열람 공간 및 설비가 마련되어야 하고 복사, 대출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이용자 유형별 서비스 방안, 접근 정책의 수립, 정보서비스 관리 방안 등을 연구하여 기록관 정보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였다.<sup>9)</sup> 그러나 그는 기록을 제공함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들은 제시하고 있

7) Jenkinson. H, 『A Manual of Archival Administration』, Oxford Press, 1992, p.107.

8) Schellenburg. T, 이원영 옮김, 『Modern Archives: Principal and Techniques, 현대 기록학개론』, 진리탐구, 2002, pp.242~255.

9) Mary Jo Pugh,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 Manuscripts』, Society of Armerican Archivists, 2005.

지만 모두 이용자의 신청에 의한 소극적 제공이라는 점에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내의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 이원규는 수집과 이관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발효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으므로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록물 수집은 최우선적인 과제였기에 기록물의 수집, 이관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기록물 수집과 이관의 실무적인 부분을 설명하면서 수집과 이관은 기록물관리의 중추적인 시스템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행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sup>10)</sup>

이상민은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선별, 정리, 기술(記述), 보존을 담당하며 기록물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역사학자는 제공되는 기록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자이지만 이 둘의 관계는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아키비스트의 역사 연구도 선별과 기술과 같은 기록이 관리 과정에서 필요하고, 역사학자도 기록물의 선별과 관련 법령 제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둘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sup>11)</sup>

기록학이 독자적으로 자리잡게 된 초기에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기록물의 서비스에 관한 분야에도 관심이 적었다. 반면 최근에는 기록물관리 기관의 기록 정보 서비스에 대한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이 기록물관리기관의 공공프로그램이나 아웃리치 그리고 기록정보 서비스에 대한 발전 방안과 현황을 살핀 연구들이다.

정은진은 과거에는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데 소홀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서양의 대표적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미국의 NARA와 영국의 TNA, 호주의 NAA의 공공프로그램(Public Program)을 소개하였다. 이들의 출판, 전시, 교육의 사례를 들면서 아키비스트는 공공프로그램과 홍보 전문가가 되기를 주저하면 안 되며, 이는 기록물과 기록물관리기관을 홍보하는 일이 대중에게 기록물관리기관의 이미지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큰 비

---

10) 이원규, 「공공기록물의 수집·이관과 아키비스트의 역할」, 『기록학연구』 제2호, 2000.

11) 이상민, 「역사를 위하여: 아키비스트와 역사가의 역할」, 『기록학연구』 제6호, 2002.

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2)</sup>

설문원은 정은진의 연구에서 예를 들었던 TNA와 NAA의 사례를 통해 기록정보 서비스를 위한 전략계획의 수립구조, 주요내용, 전략의 원칙 등을 분석한 후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서비스 실행전략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록정보서비스의 유형을 검색 및 열람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 활용촉진 서비스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검색도구 개발, 편찬 및 콘텐츠 개발, 전시물 개발, 문화 활동 및 이벤트 등을 제시하였다.<sup>13)</sup> 위의 두 연구는 적극적인 기록물관리기관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심세현과 이성숙은 아웃리치 서비스 중에서도 출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외의 현황을 살폈다. 이들은 국가기록원이 이러한 출판서비스를 하고있기는 하지만 독창적인 기획력이 부족하고, 제작시스템이 비효율적이며, 다양한 콘텐츠가 부족하여 실무자와 연구자만을 위한 출판물인 점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sup>14)</sup>

위의 연구들을 살펴 보면 기록물의 서비스와 관련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서양에서 기록물관리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기록물관리기관의 사례를 보고 국가기록원에 적용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연구가 많다. 그러나 기록물관리에 있어 선진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중국의 사례가 많이 소개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기록물의 편연은 아직 국내에 소개된 바가 없다. 또한 아키비스트가 기록물관리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대중들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 동안 서양의 사례만을 들던 기록정보 서비스 분야에 중국의 사례를 통해 아키비스트의 역할로서 기록물의 편연을 재고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12) 정은진, 「영국기록물관리기관 공공프로그램의 역할과 운영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제16호, 2007.

13) 설문원, 「기록정보서비스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제25권 제3호, 2008. 설문원, 「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과 과제」, 『기록인(IN)』, 제3호, 2008.

14) 심세현, 이성숙, 「기록물관리기관의 출판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제17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0.

## 2. 기록물의 편연(編研)에 대한 인식

### 1) 편연의 정의

본 장에서는 기록물의 편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려 한다. 그 전에 짚고 가야 할 것이 편연에 대한 정확한 정의이다. 본 연구에서 계속 언급되는 ‘편연(編研)’은 중국 당안학의 편연에서 차용한 것으로 기록물의 담당자가 소장 기록물을 기초로 진행하는 편집과 연구 활동을 말한다.<sup>15)</sup> 편연이라는 단어는 중국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당안학계에서만 특별히 사용하는 전문용어이다. 편연은 당안문헌편연구작(檔案文獻編研究工作)을 줄여 말하는 것으로 1950년대 초 당안 실무부문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1980년 2월 14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지시한 전국당안공작(全國檔案工作)에 관한 국가당안국(國家檔案局)<sup>16)</sup>의 회의보고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공작의 기초가 비교적 양호한 당안관(檔案館)은 역사연구 서비스를 위해서 당안 사료의 편연구작, 당안 내용의 연구, 당안 사료의 회편(匯編)에 착수하고, 역사편수에 참여해야 한다.<sup>17)</sup>

이 후로 편연이라는 단어가 점차 통용되기 시작하였다.<sup>18)</sup> 이 문장은 당안관의 당안 활용에 대한 목적과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다. 아키비스트는 적극적으로 당안을 가공하여 제공해야 하고 그것이 아키비스트와

---

15) 덩샤오핑, 천즈웨이, 정문상 옮김, 『당안관리학 개론: 중국의 현대 기록관리학』, 서울: 해안, 2003, p.341.

16) 중국의 당안관리(檔案管理)는 통일영도(統一領導), 분급관리(分級管理)가 그 원칙인데 이는 중앙정책기구가 통일된 원칙에 입각해서 전체 국가의 기록물관리체제를 운영하되, 실제적인 기록물의 관리는 각급 기록물관리기구를 통해서 시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앙정책기구에 해당하는 것이 국가당안국(國家檔案局)이다.

17) 工作基礎較好的檔案館, 要著手進行檔案史料的編研工作, 研究檔案內容, 彙編檔案史料, 參加編史修志, 爲曆史研究服務.

18) 曹喜琛, 『檔案研究概論』, 北京: 檔案出版社, 1994, p.2.

당안관의 역할임을 강조한다.

편연은 전체적인 개념으로서 편(編)과 연(研)이 양자 간에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 소위 연(研)이라는 것은 당안의 내용을 연구하는 것이고, 편(編)은 연(研)의 심화 가공의 의미라는 것이다. 즉, 편(編)속에 연(研)이 있어 편연(編研)이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sup>19)</sup> 즉 위의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편연이라는 것은 기록물의 제공을 위한 아키비스트 연구 활동을 총괄하는 것으로 기록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활동, 그리고 기록물의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편집하여 제공하기 위한 아키비스트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당안의 편연 형태는 크게 당안 사료와 현행 기관 문건 회편, 당안 문적(檔案文摘) 회편, 당안 참고자료, 사서 편찬의 네 가지가 있다.

#### ① 당안 사료와 현행 기관 문건 회편(文件匯編)

당안 원문을 집중적으로 모아 편집한 책자로서 도서로 출판하지만 일차 당안 문헌으로 간주한다. 당안 문건에 대한 비평, 표기, 배열 처리, 편집 배열 등을 통해 독자들을 배려하여 출판한다. 법규 문건 회편, 중요 문건 회편, 발송 문건 회편, 회의 문건 회편, 공보(公報), 정보(政報), 기타 특정 주제 문건 회편이 있다. 이 간행물의 경우 중국의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자주 찾게 되는 형태이다. 원문보다도 문건회편을 열람하는 이유는 당안관에서 이를 발행하여 당해 당안관에만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당안관과 도서관 등지에도 비치하여 더욱 많은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 ② 당안 문적(檔案文摘) 회편

당안 문적이란 당안 원문을 축약한 것을 말한다. 당안 문건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검색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영구기록물 기술(記述)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기록물의 기술과는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고,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기록관리의 활동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당안 문적 회편이란 한국의 경우에 빗대면 기술서집(記述書集)에 해당하는 것이다.<sup>20)</sup>

19) 陳智爲, 鄧紹興, 劉越男의 같은 책, p.346.



중국은 이를 출판하여 당안 문건의 내용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데 활용한다. 그 종류에는 학술 논문 문적 회편, 과학 기술 성과 문적 회편, 특정 주제 당안 문적 회편이 있다.

### ③ 당안 참고 자료

당안 내용에 근거하여 편집 가공한 서면(書面)자료의 일종이다. 대사기(大事記), 조직 연혁, 특정 주제 개요, 회의개요(簡介), 통계 수치 회집 등이 있다. 이는 당안 내용에 대한 연구의 종합과정을 거쳐 집필한 가공 작품(즉, 3차 문헌)이다.<sup>21)</sup> 국내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대사기와 특정 주제개요는 사건전거레코드, 조직 연혁은 단체전거레코드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up>22)</sup> 대사기나 특정주제개요, 조직 연혁과 한국의 전거레코드는 이용자들이 기록물의 이용에 있어서 검색과 기록의 맥락이해에 있어 도움을 주는 참고자료로 비록 명칭과 기록관리 과정상의 단계는 다르지만 그 기능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④ 사서 편찬

소장 당안을 기초로 사서 편찬에 참가하거나 단독으로 역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다.<sup>23)</sup>

위의 당안 편연물 중에서 당안 사료 회편과 현행 기관 문건 회편의 경우는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의 출판물이다. 하지만 당안 문적 회편과 당안 참고 자료는 한국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동일한 기능을 가졌지만 명칭이 다른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다른 것은 중국은 성

20) 기술서집은 흔하지 않은 형태의 발간물이다. 기술이라는 행위자체가 국가기록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발간한 기술서집은 2008년부터 대통령선물 기술서집 I -대통령선물100선(2008), 대통령선물 기술서집 II -G20 특별한 선물(2010), 대통령선물 기술서집 III -특별한 선물과 세계문화(2011), 대통령기록물 기술서집(2011) 총 4권이 전부이다.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발간도서. 온라인 콘텐츠 가이드북』, 2011, pp.43~45.

21) 이와 같은 자료들은 기록관리학 관점에서 볼 때 전거(典據)레코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국제표준인 국제전거레코드기술규칙(ISAAR (CPF):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milies)을 준용한 ‘국가기록원 전거레코드 지침’에 따라 인물, 단체, 사건 전거레코드를 작성한다.

22) 목록에서 접근점으로 선정된 인명, 단체명, 통일 서명, 주제명, 총서명, 지명 등의 표준화된 표목 형태를 다른 형태로 연결하여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레코드를 의미한다.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0, p.193.

23) 陳智爲, 鄧紹興, 劉越男의 같은 책 pp.343~345.

(省)급 이상 당안관에 모두 편연 기구를 설치해 중앙영구기록물관리기관 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편연 활동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안관(館)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내에 설치된 당안실(室)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대사기만 보더라도 기관 대사기, 국가 혹은 지역 대사기 등이 있어 『중공 베이징시위 대사기(中共北京市委大事記)』, 『저장성 1949~1963년 행정구획 대사기(浙江省 1949~1969年行政區劃大事記)』 등 지방의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에서도 소장 당안을 중심으로 필요에 의해 대사기를 편찬할 수 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발행되거나 전문 사전, 사료 회편, 전문 서적의 부록으로 첨부되기도 한다.<sup>24)</sup>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기록물의 기술(記述)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록물의 기술(記述)이라는 활동은 영구기록물의 검색 등의 이용을 돕는 도구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 내 관련 부서가 전담하고 있다.<sup>25)</sup> 그 외에는 국가기록원 내의 대통령기록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기록물 기술을 하지 않을뿐더러 보존과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국은 영구기록물관리하는 기관이라면 중앙과 지방의 구분 없이 기술집을 편찬을 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의 편찬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술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편연은 기록정보 서비스(reference service)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푸(Mary Jo Pugh)는 기록정보서비스(reference service)를 현재 이용자 및 잠재적 이용자가 소장기록을 활용하

24) 陳智爲, 鄧紹興, 劉越男의 같은 책, pp.352~360.

25) 국가기록원의 소개 중 기록정보 서비스부의 공개서비스과에 업무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1. 기록물의 공개 및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정책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 2. 기록물 공개·비공개 기준 수립 및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3. 소장 비밀기록물의 해제·재분류 및 활용, 4. 기록물 기술정책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 5. 기록물 기술제도의 운영 및 소장기록물의 정리기술, 6. 기록물 검색도구의 구축 및 운영, 7. 국가기록물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이를 통해 기록정보서비스부의 공개서비스과에서 기술에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2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next/organ/divisionInfo.do?org\\_id=1312139](http://www.archives.go.kr/next/organ/divisionInfo.do?org_id=1312139) ciited 2014. 6. 25].

여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 즉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록과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기록관리자의 활동<sup>26)</sup> 이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녀는 2005년 개정판에서 기존의 정의에 덧붙여 잠재적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와의 모든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공공서비스 프로그램 전체를 포함시키고 있다.<sup>27)</sup> 이러한 기록정보서비스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기록자체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검색 및 열람서비스, 기록콘텐츠·편찬물·전시물 개발 등을 통한 부가가치 서비스, 기록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 등이다.<sup>28)</sup> 편연은 이 중에서 부가가치 서비스에 속하는 편찬 및 콘텐츠개발과 관련이 있다.

엄밀히 보자면 편연은 기록정보서비스와 일부분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기록정보서비스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편연은 아키비스트의 기록물 연구 활동과 그에 따른 성과물이나 성과물을 생산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편연은 아키비스트의 역할로 적극적인 기록물의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기록정보서비스는 기록관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록정보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수동적인 아키비스트의 모습이라면 편연은 이와 상반되는 적극적인 아키비스트의 태도를 권장하고 있다.

편연은 이처럼 중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개념이다. 기록학에서 흔히 말하는 기록정보서비스와 비슷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나 국내에서는 중국에서

26) Pugh Mary Jo,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1992, 설문원 역, 『기록정보서비스』, 진리탐구, 2004, P.17.

27) Pugh, 2005: 김순희, 2010 재인용.

28) 설문원, 「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과 과제」, 『기록인』, 제3호, 2008, p.15.

<기록정보서비스의 유형별 목표>

유형	목표	세부사항
1. 검색 및 열람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쉽고, 안전하게 소장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색도구 개발 검색서비스 온라인 열람 서비스 오프라인 열람 서비스
2. 부가가치 서비스	기록을 통해 국민들이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편찬 및 콘텐츠 개발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시물 개발
3. 활용촉진 서비스	기록관리 및 기록관리기관의 존재 및 중요성을 알린다.	문화활동 및 각종 이벤트 언론홍보 이용자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처럼 독자적으로 인식되는 개념이 아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곳에도 이를 대체할 만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원만한 논지전개를 위해 ‘편연’을 특수한 용어로 여기지 않고, 보편적 개념처럼 사용하도록 하겠다.

## 2) 기록학 개론서와 교과과정에 나타난 편연에 대한 인식

개론서란 한 학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한 학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중점을 두는 내용을 추려서 집필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개론서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방법으로 한 논문도 있었다<sup>29)</sup>. 최성락과 이해영은 개론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 그 학문의 교육 부문의 경향성을 알아볼 수 있으며 학문 연구 측면에서도 논문 분석과는 다른 일면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였다.<sup>30)</sup> 기록학 개론서는 기록학에서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게 되므로 그 학계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을 알아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기록물의 편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의 기록학 개론서를 분석해 보려 한다.

우리나라는 기록학 연구와 교육이 시작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아 관련 순수 국내서적(외국 기록학 번역서를 제외하고)이 많지 않은 상태이다. 첫 기록학 개론서 격인 양태진(1993)의 『기록보존학개론(記錄保存學概論)』이 출간된 지 올해 20년이 되었다.<sup>31)</sup> 이 책은 당시 국내에서는 기록학이

29) 개론서의 정성적(定性的)분석은 기록학계에서는 행해진 적이 없지만 다른 학계에서는 이미 시도된 연구방법이다. 최성락, 이해영의 「한국 행정학 교육의 변화: 행정학 개론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9권 제4호, 2009, pp.163~185, 이기상의 「철학개론서와 교과과정을 통해 본 서양철학의 수용, 1980년 이후」, 『철학사상』 7, 1997 pp.185~257 등 이외에도 개론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있다.

30) 최성락, 이해영의 위의 글. p.163.

31) 「‘기록보존’ 첫 개론서 눈길 정부기록보존소 과장 양태진씨 퍼내」, 『한겨레』, 1993. 12. 1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view.nhn?editNo=6&printCount=&publishDate=1993-12-01&officeId=00028&pageNo=13&printNo=1747&publishType=00010&articleId=&serviceStartYear=1920&serviceEndYear=1999> ciited 2014. 6. 25].

단일 학문으로 자리 잡기 전의 상황에서 정부기록보존소의 직원이 집필한 것이다. 당시 미국, 캐나다, 호주의 기록학, 문헌정보학 관련 논문과 서적을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2)</sup> 당시 기록학 개론서가 전무한 상태에서 발행된 이 책은 기록관리 과정에 대해 포괄적이지 않으며 미국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데 자신의 의견과 참고문헌의 내용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당시의 기록학계의 현실적 여건과 학문적인 논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sup>33)</sup> 이 책에서는 기록물의 편연을 기록관리 단계의 하나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기록물의 수집과 평가, 정리와 기술, 그리고 활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기록물의 활용을 위해 기록물의 편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제2장, 제3장, 제5장에서만 수집, 평가, 정리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활용을 위한 과정인 기록물의 편연 활동은 아예 구성하지 않았다.

그 뒤에 두 번째로 발간된 기록학 개론서는 김상호의 『기록보존론』인데 이 책은 한국의 기록관리의 법령과 제도에의 역사적 접근을 연구한 것으로 개론서라기 보다는 한국기록관리의 제도사를 주로 다루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문헌정보학과 교수로서 기록학을 문헌정보학의 영역 내에서 도서관학, 서지학, 정보학 등과 더불어 하나의 분과학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춰 기록보존인<sup>34)</sup>을 양성해야함을 주장한다.<sup>35)</sup> 따라서 기록물의 편연이 아키비스트의 역할 중 하나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기록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응해 열람을 도울 뿐이라고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한정시킨다. 국내의 초기 기록학 개론서에 나타난 아키비스트는 기록을 보존하고 열람 이용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만 인식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개론서의 구성에서도 기록물의 편연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32) 양태진(1993)의 記錄保存學概論은 총 6장으로 제1장 기록과 기록보존물, 제2장 기록물의 유형과 수집 및 정리, 제3장 기록물의 평가제, 4장 기록물 보존체제와 공문서식, 제5장 훼손되는 기록물과 복원문제, 제6장 전문직으로서의 기록보존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33) 박성진, 「[서평] 기록학 연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양태진 편, 『기록보존학개론』, 김상호 지음, 『기록보존론』, 『기록학연구』 Vol 2, 한국기록학회, 2000, pp.239~250.

34) ‘기록보존인’이라 칭한 것은 기록학 관련 용어 의미 정립이 되기 전 archivist를 기록보존인으로 records manager를 기록관리자로 나누어 썼던 것에 기인한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칭한다.

35) 김상호, 『기록보존론』, 아세아문화사, 1999.

1990년대는 국내 기록학 개론서의 발간으로 기록학의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기록학 관련 인프라가 새로이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학계에서도 이전보다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외국의 저명한 기록학 개론서가 그대로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하였고 이후로 점차 국내 저자의 개론서들도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최정태(2006)의 『기록학개론』<sup>36)</sup>, 김정하(2007)의 『기록물관리학 개론』, 한미경, 노영희(2011)의 『기록 및 기록관리의 이해』와 한국기록관리학회(2013)에서 출판한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그리고 최근 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기록관리실무시리즈 제1권 기록관리개론』까지 총 5권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개론서 내용을 비교하고자 공통적으로 구성되는 내용을 분석하여 <표1>과 같이 기록관리의 역사, 제도, 교육, 기관, 실무와 이론, 기타, 총 6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한국기록관리학회의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은 그 외의 개론서와는 다르게 기록학계의 여러 연구자들이 공통 저자로 나서 발간한 개론서로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책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책은 최근 기록관리 법령의 개정과 제도적 변화,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하여 가장 최신의 내용을 반영한 책이다. 또한 이 책은 다른 어떤 개론서보다 실무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이론과 함께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기록물의 편연에 관한 내용도 다른 개론서들에 비해 비중을 좀 더 둘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6장 기록정보서비스에서 기록정보서비스의 유형을 다루면서 부가가치 서비스로 기록물콘텐츠와 편찬물을 언급하며 약간의 지면을 할애했을 뿐이다.

---

36) 최정태의 '기록학개론'은 2001년에 처음 출판되고 그 이후로 2006년 개정판이 출판되었다. 본고에서는 2006년 개정판을 다루기로 한다.

<표1> 기록학 개론서 목차 비교

	최정태 기록학개론	김정하 기록물관리 학 개론	한미경, 노 영희 기록 및 기 록관리의 이 해	한국기록관 리학회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 의 과학	국가기록원 박지태 기록관리 실무시리즈 제1권 기록관 리개론
역사	제1장 기록· 기록관	제7장 바티칸 비밀기록물보 존소의 역사	2. 기록, 기록 관, 기록전문 가	제2장 기록관 리의 역사	
제도		제4장 기록물 관리제도	4. 기록관리의 법제화 9. 정보공개와 비밀기록물관 리제도	제3장 기록관 리와 법	제2장 기록관 리 법령 및 제도
교육	제7장 기록전 문가와 기록 학교육	제5장 기록물 관리교육과 기록물관리전 문가	3. 기록관리와 기록관리학		
기관	제6장 대학기 록관 제9장 기록관 련 국가기관 과 학술단체	제6장 도서관 과 기록물보 존소	제2부 세계의 기록관과 기구	제10장 기록 관리 기관	
이론 과 실무	제2장 기록학 의이해 제3장 기록물 의 평가 선별 제4장 기록물 의 조직 제8장 기록물 의 보존	제1장 기록물 관리의 제 문 제 제2장 기록물 관리 이론 제3장 기록물 관리와 기록 물보존소	1. 기록, 기록 관리, 기록전 문가의 중요 성 5. 기록의 관 리 6. 기록의 평 가와 보존 7. 전자기록과 기록관리	제4장 기록의 선별과 평가 제5장 기록의 분류와 기술 제6장 기록정 보서비스 제7장 전자기 록관리 제8장 전자기 록시스템 제9장 디지털 아카이빙	제1장 기록의 이해 제3장 기록관 리운영 제4장 기록물 보존 및 활용
기타	제5장 정부기 록물·정부간행 물		8.대통령기록 물과 대통령 기록관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본 5개 기록학 개론서의 공통점은 어떤 책도 기록물의 편연과 관련한 내용을 크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록물의 편연은 <표1>에서 나눈 6가지의 분류 중에서 ‘실무와 이론’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혹은 아키비스트의 역할이나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로서 다룰 수 있는 주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록물관리 실무에 대한 내용에서 수집, 정리, 기술, 보존과 정보서비스의 기록관리 각 단계를 다루게 된 것도 최근에 출판된 개론서에서나 볼 수 있다. 게다가 기록물의 편연이 속하는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해 다루는 것도 이용자의 신청에 의한 아키비스트의 수동적인 역할을 주로 담고 있다. 그 중 한국기록관리학회의 『기록관리론』에서만 기록정보콘텐츠<sup>37)</sup>에 대한 내용이 약간 언급되었을 뿐 그 외의 세 가지 개론서에서는 기록물의 편연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개론서인 저자 박지태의 『기록관리실무시리즈 제1권 기록관리개론』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진다. 이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제1장 기록의 이해, 제2장 기록관리 법령 및 제도, 제3장 기록관리 운영, 제4장 기록물 보존 및 활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표1>에서의 분류로 볼 때 ‘제도’와 ‘이론과 실무’에 속하는 내용이 주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책도 기록물의 편연이라는 내용은 큰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고, 제3장 기록관리 운영의 제5절 기록물 기술 및 평가, 폐기에서 아주 짧게나마 기술에 대해 언급하고, 제4장 기록물 보존 및 활용의 제2절 3. 기록정보서비스에서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

개론서와 더불어 교과과정 또한 기록학계에서의 기록물의 편연에 대한 인식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교과과정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한국의 기록학 교과과정을 살피기 전에 법률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이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처럼 전문가단체가 권장하

37) 국가기록원에서는 열람요청이 많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록물의 특성을 이해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의 생산배경 및 소장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콘텐츠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검색방법을 제공하여 기록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료(사이트, 기관, 소장기록)를 제공하여 인터넷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서비스이다. 기록정보 콘텐츠는 주제 콘텐츠, 시대 생활 콘텐츠, 교육 콘텐츠, 전시관, DB콘텐츠의 5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기록정보 콘텐츠 웹페이지 [<http://theme.archives.go.kr/next/theme/themeMain.do>] ciited 2014. 6. 25].



는 기록학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은 없으나, 법률에서 기록관리학 영역별 교육과정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8조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규정에 기인한 것이다. 제 1항<sup>38)</sup>의 각 조항을 보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은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대신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국가기록관리교육원에서 1년 코스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교육원에서의 교육과정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해져있다.

<표2> 기록관리학 영역별 교육과목<sup>39)</sup>

구 분	교과 내용
기초영역	정부조직 및 행정론, 기록관리학개론, 기록관리 관련 법령
전문영역	기록평가·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론, 기록정보서비스론, 전자기록관리론, 기록시스템론, 업무분석론, 민간기록관리론
기타	기록관리 실습, 논문지도

<표2>의 교과들 중에서 ‘기록정보서비스론’에서 기록물의 이용과 제공, 기록정보콘텐츠의 제작과 관련한 내용이 적게나마 언급이 된다면 기록물의 편연을 조금이나마 다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한 과목 내의 일부분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다지

38)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1.2.22, 2013.3.23>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제42조 관련).

큰 의미는 없다. 상술한 대로 기록 정보 서비스 편연과는 그 대상과 주체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상이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록학 대학원 교과과정에서는 기록물의 편연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을까. 한국은 기록학 교육과정이 대부분 협동과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명지대와 한국외대의 경우에는 전임교수가 있으며 학술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어 이 두 학교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외대의 기록학 대학원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개설된 과목들을 살펴보면 설립 초기에는 기록학의 기초적인 과목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전자기록 컴퓨터 공학과 정보학관련 교과가 늘어났으며 전문적인 교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sup>40)</sup>

기록관리학 개론, 전자기록물의 관리, 한국 기록관리의 역사, 기록관리 실습, 서양기록관리의 역사, 기록관리와 웹프로그래밍, 기록의 평가, 기록의 정리와 기술, 전자기록관리 연구, **기록콘텐츠의 이해와 기록물의 문화적 활용**, 지방기록관의 운영과 향토사와 문화, 기록의 운영과 수집,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와 콘텐츠 서비스**, 민속사와 민속기록의 보존과 활용, **기록관리시스템의 이해와 기록정보콘텐츠 관리**, 기록물관리법과 행정법, 민간기록물 관리, 행정제도의 이해와 공기록물 관리, 레코드컨티뉴엄 이론과 사회문화 사상, 한국사와 기록관리 쟁점

한국외대의 교과과정은 기록콘텐츠의 이해와 기록물의 문화적 활용,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와 콘텐츠 서비스, 기록관리시스템의 이해와 기록정보

---

40) 자세한 내용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 교육과정 > 구개설과목을 참고하였다. 기록관리와 문화산업, 디지털 보존 세미나(2008.2), 데이터베이스론(2009.1), 지방기록관의 운영과 향토사와 문화(2009.2),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와 콘텐츠 서비스(2010.1) <http://newarchivist.cafe24.com/> cited 2014. 6. 25].

콘텐츠 관리와 같이 기록정보 활용의 콘텐츠화를 주제로 하는 교과목의 편성이 돋보였다. 이들 교과목은 기록물의 편연을 주제로 하는 교과목들이다. 전자기록 시대에 맞추어 전자기록물 관리의 전반과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기록물 콘텐츠, 기록의 활용에 대한 과목과 함께 민간 기록물과 공공기록물의 균형도 빠뜨리지 않았다. 또한 기록관리의 역사도 빼놓지 않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교과목편성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는 지난날 기록물을 편찬하던 전통을 살려 개설한 과목이 아니다. 서양의 기록학 측면의 기록물 콘텐츠는 역사교육이나 기록물관리기관의 홍보를 위한 콘텐츠의 성격이 크다. 서양에도 기록물을 편집해 출판하는 일이 있지만 동양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렇기에 서양에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과 같은 우리의 기록문화를 보고 놀라워한다. 그러나 기록학 교과과정에서는 이런 기록물 편찬을 하던 전통을 잇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명지대의 기록관리학 교과과정을 보면 기록물의 활용과 관련한 교과는 단독으로 개설되지 않았다.

기록학개론, 세계의 기록관리제도, 기록정보서비스론, 분류기술론연구, 사진영상기록관리론, 기록학연구방법론 1, 기록관리표준연구, 기록평가론연구, 기록관리프로젝트연구, 기록보존론연구, 정보관리와 DB, IT 트렌드 분석, 응용소프트웨어패키지연구 1, 정보시스템 요구분석과 설계, 정보아키텍처와 이용, 컴퓨터 프로그래밍, 응용소프트웨어패키지연구 2, 기록관리실습, 논문연구 1, 업무분석방법론연구, 기록학논선평론 1, 전자기록관리론, 기록관리관련법연구, 기록관경영론, 근현대한국기록관리제도, 기록관리시스템설계연구, 역사기록관리연구

명지대 기록학 교과과정은 정보학 관련 과목과 컴퓨터 공학 관련 과목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자기록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록물의 편연 관련 과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현용기록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전자기록 시대에 맞춰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의 설계나 웹 프로그래밍 쪽에 중점을 두었다. 기록물의 생산부터 이관까지 모두 전산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기록관리에서는 기록물이 생산되자마자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정부업무기능연계모델(Business Reference Model, BRM)’<sup>41)</sup>에 기반한 ‘기록관리기준표’<sup>42)</sup>에 따라 분류되고, 보존기간, 공개여부, 접근권한 등이 정해진다. 아키비스트는 종전의 종이 기반 기록물이 주가 되던 때에 비해 기록물 분류와 수집 업무에 크게 비중을 둘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 역시 관리자로서 알아야할 부분인 것이다.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진 만큼 기록의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아키비스트는 이전과 비교해 남는 역량을 기록의 활용을 위해 돌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록물의 분류와 조직, 이관의 과정에서 이전보다 역할이 크지 않은 만큼 기록물의 활용부문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

또한 전문 연구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정부의 복잡한 기능의 증거인 기록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대중들은 일부 기록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아키비스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때 아키비스트의 역량이 적극 발휘될 수 있다. 적극적인 기록물 편연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대중들이 흥미로워할, 그리고 알아야할 기록물들을 선별하여 재구성하는 일이야말로 현대 아키비스트의 역할인 것이다.

41) 정부기능을 서비스 및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정부업무기능분류체계. 정부업무기능연계모델은 정부기능을 분류, 연계하여 전 중앙행정기구나의 단위과제별 기본정보와 유관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합하여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다. 국가기록원, 「NAK/S 4:2012(v2.1)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v2.1)」, 2012, p.3.

42)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 처리를 위해 단위 과제별로 관리 기준을 제시한 표.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임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 권한 등이다. 국가기록원 같은 표준, p.2.

그러나 국내의 개론서에서는 아키비스트의 역할로서 기록물의 편연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을 찾기 어려웠다. 중국과 같은 기록물 편찬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한국은 이러한 전통이 단절되었다. 어째서 한국은 기록 전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새로운 기록 환경을 구축한 것일까?

### 3) 중국의 기록학 개론서와 교과과정에 나타난 편연 인식

한국의 기록학 개론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기록물의 편연에 대해 중요하게 다룬 책은 없었다. 기록정보 서비스의 한 방편으로 짧게 구성한 것이 그나마 비중있게 다뤄진 것이었다. 반면에 중국의 대표적 당안학 개론서라 할 수 있는 천즈웨이(陳智爲), 덩샤오싱(鄧紹興), 리우위에난(劉越男) 편주(編著)의 『당안 관리학 개론(檔案管理學概論)』<sup>43)</sup>을 살펴보면 국내의 기록학 개론서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개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당안의 이관부터 평가, 정리, 서비스제공까지의 기록관리 실무 일련의 과정을 다루고 있고 9장부터 13장까지는 특징 있는 당안의 관리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중국의 『당안 관리학 개론(檔案管理學概論)』은 실무부분에 중점을 두고 국내의 개론서들이 1/3~1/2 정도에 할애하고 있는 부분을 전권에 실어 실무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당안 관리의 한 과정으로 「제7장 당안의 편연」이 하나의 장으로 들어가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개론서의 구성으로 볼 때 기록물의 활용 부분을 크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이 기록물 편연에 대한 관심은 국내보다 다소

---

43) 이 책은 현재 교육부로 바뀐 교육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당안학 관련 고등 교육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집필된 것으로 중국의 런민대학(人民大學) 덩샤오싱(鄧紹興)교수와 천즈웨이(陳智爲), 리우위에난(劉越男) 교수가 주편하였다. 1998년 초판으로 이어 2003년, 2008년에 개정판을 간행하였다. 런민대학은 1954년 중국 최초로 4년제 역사당안학과를 개설하여 중국 당안학 교육의 기초를 다진 후, 1985년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당안학원을 설치함으로써 중국을 대표하는 당안학 분야 전문 고등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중국런민대학 당안학원 교수진에 의해 집필된 이 책은 중국의 현대 당안학이 거둔 일련의 성과를 집약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당안 관리학 개론 옮긴이의 말에서 발췌 pp.8~9).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조사의 과정에서 발견한 새로운 사실 중 하나는 중국에는 당안의 편연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된 교과가 있다는 것이었다. 당안문헌편찬학(檔案文獻編纂學)이 바로 그 것인데, 국내에서는 개론서에서도 한 챕터의 일부분으로 극히 적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국은 단독 교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7장 당안의 편연(檔案的編研)에서는 당안의 편연 내용과 의의, 주요 편연의 종류와 그 사례, 그리고 주요 당안 참고 자료의 구성 원칙과 특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당안의 편연은 당안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당안을 기초로 사회의 각 방면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당안 정보를 당안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당안정보개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sup>44)</sup> 국내의 기록정보서비스와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편연에 접근하고 있고, 이를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당안 편연에 대한 인식은 교육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나 국내의 기록학 교과과정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확연히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먼저 중국의 기록학 교과과정은 중국과학평가센터(中國科學評價中心)에서 발표한 「2013~2014연구생교육평가보고」를 토대로 당안관리학 과정에서의 우수대학의 교과과정을 살펴보았다. 「2013~2014연구생교육평가보고」에서는 당안학 석박사 교육과정 방면에서 중국런민대학(中國人民大學)<sup>45)</sup>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우한대학(武漢大學), 난징대학(南京大學)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sup>46)</sup> 중국런민대학은 신 중국 성립 이후 처음으로 당안학 교육기관을 설립하였고 중국 당안학 교육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다. 또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교과과정과 교수진면에서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44) 陳智爲, 鄧紹興, 劉越男의 같은 책, p.343.

45) 중국런민대학(中國人民大學)의 정보자원관리학원(信息資源管理學院)에서는 학부과정 석·박사 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과정에서는 당안학, 정보관리와 정보계통 전공을, 석사과정에서는 당안학, 도서관학, 정보학, 정보자원관리학, 중외정치외교사(中外政治外交史) 전공을, 박사과정에서는 당안학, 정보학, 정보자원관리학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모두 운영하며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46) 2013-2014年高校研究生教育分專業排行榜 2013-2014년 고등교육기관연구생교육순위 [<http://www.nseac.com/> ciited 2014. 6. 25].

중국의 대표 당안관리학 교육기관인 중국런민대학, 우한대학 그리고 난징대학은 모두 정보관련 단과 대학 안에 당안관리 혹은 당안학과를 설치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학부과정부터 석·박사 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모두 학부과정에 기록물 편연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었다. 중국런민대학은 당안학 학부과정과 박사과정에 각각 당안문헌편찬학(檔案文獻編纂學)과 중국당안문헌학론(中國檔案文獻學論)이라는 당안 편연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sup>47)</sup> 우한대학(武漢大學)은 당안문헌편연(檔案文獻編研)<sup>48)</sup>을 난징대학(南京大學)에서는 당안편연학(檔案編研學)<sup>49)</sup>을 학부과정에서 전공핵심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었다. 우수 당안관리학 교육기관에서 기록의 편연 관련 과목을 개설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런민대학의 개설 과목 중에서 편연 관련 과목 이외의 눈에 띄는 점은 지방지(方志)학을 개설하였다는 것이다. 이 과목은 국내 기록학 교육기관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과목으로 지방지를 편찬하여왔던 전통을 잇고자 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순위(排名)	학교명(學校名稱)	성급(星級)
1	중국런민대학(中國人民大學)	5★
2	우한대학(武漢大學)	4★
3	난징대학(南京大學)	4★
4	후베이대학(湖北大學)	4★
5	상하이대학(上海大學)	4★

47) 중국런민대학 정보자원관리학원 [<http://www.irm.cn/>] ciited 2014. 6. 25].

48) 우한대학 정보관리학원 [<http://sim.whu.edu.cn/>] ciited 2014. 6. 25].

49) 난징대학 정보관리학원 [<http://im.nju.edu.cn/>] ciited 2014. 6. 25].

<표3> 중국 대표 당안관리학 교육기관의 개설과목 (학부과정)

교육기관	개설과목
중국런민대학	정보관리기초, 정보조직, 정보기록기술, 정보정책과법 규, 컴퓨터기초,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사무자동화, 프로그래밍언어, 문서자동화시스템설계, 당안 학개론, 문서학, 당안관리학, 전자문서관리, 지식관리, <b>당안문헌편찬학</b> , 당안문헌평가학, 문헌보존기술학, 중 국당안사업사, 중국고대전적, 청대(清代)문서, 명청사 (明清史)와명청당안, <b>지방지(方志<sup>50)</sup>)학</b> , 중국정치제도 사, 사회조사연구방법
우한대학	당안학기초, 문서와비서학, 당안관리학, 전자문서관리, 중외당안사업, <b>당안문헌편연</b> , 당안문헌유산보존, 전자 정부개론, 정부정보관리, 당안법규학, 지식관리
난징대학	문서비서학, 일반당안관리학, 과학기술문헌학, 과학기술 당안관리학, <b>당안편연학</b> , 정보입문, 문헌보존기술학, 전 자문서와전자당안관리, 당안정보화건설

개론서와 교과과정의 분석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편연인식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편연을 개론서에서 한 챕터로 구성하고 있고, 단일 과목으로도 구성되어 있다. 우수 당안학 교육기관에서는 모두 편연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개론서는 기록정보 서비스부분에서 콘텐츠나 출판에 대한 언급이 편연과 가장 가까운 내용이었다. 교육과정에서도 유명 기록학 교육기관 중 한 곳에서만 편연 관련 과목을 개설하였다. 전반적으로 현대의 전자기록관리와 현용기록관리에 치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국내에 번역된 서구의 기록학 개론서들을 보더라도 국내의 개론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sup>51)</sup> 중국에서는 개론서의 한 챕터로 구성되고, 교육과

50) 지방의 지리·특산·풍속·인물 등을 기록한 책.

51) 『기록의 이해』(James M. O'Toole, 역자 이승억, 2004)와 『기록관리학의 이해』(C. Williams, 남태우 김유승 공역, 2008), 『현대 기록학 개론』(Theodore R. Schellenberg,



정에서는 단일 교과로 개설되는 편연이 국내와 서구의 기록학 개론서에서는 기록정보 서비스의 일부분으로 나타날 뿐이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기록 전통으로 꼽히는 것들이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조선왕조의궤(朝鮮王朝儀軌)』, 『일성록(日省錄)』이 그것이다. 중국도 우리와 비슷한 기록 전통을 가지고 있다. 중국 삼국시대의 『황람(皇覽)』(220~222年)부터 청대(清代)의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1701~1705年)까지 600여종이 넘다고 알려져 있으나 현존하는 것은 200여 종 뿐이다.<sup>52)</sup> 기록물을 모아 새롭게 편찬하는 전통이 두 국가에서 발견되지만 현대에 와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슷한 기록 전통을 가졌던 두 국가에 이러한 차이점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

이원영 옮김, 2002)의 기록학 개론서 3권과 ICA의 공공부문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 교재 총 18권을 참고.

52) 陳陽風, 丁美化 「文獻檔案的整理出版原則」, 廣東財經職業學院學報 第2卷 第1期, 2003, p.85~86.

### 3. 중국의 당안 관리와 편연

#### 1) 당안 관리 제도와 당안 편연

중국의 당안 관리는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전국적으로 탄탄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1954년 11월 국가 기록관리 사업을 총괄하는 최고의 행정기구로서 국가당안국(國家檔案局)을 설립한 후부터 약 5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해왔다. 1956년 국무원(國務院)에서 반포한 “국가 당안 공작 강화에 관한 결정(關於加強國家檔案工作的決定)”이 시행되면서 관리체계가 명확해졌으며, 1959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정(黨政)의 주요 기록물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sup>53)</sup> 이처럼 중국의 현대적 당안의 관리가 시작된 것은 1950년대로 보고 있지만 비교적 체계적인 당안 학술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30년대로 보고 있다. 당시 “행정효율운동(行政效率運動)”과 역사 당안(歷史檔案)<sup>54)</sup>정리활동의 추진 하에, 몇몇 전문가와 학자가 기관 당안(機關檔案)<sup>55)</sup>과 역사 당안의 특징과 관리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1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고 20여종의 전문서적이 출판되면서 중국 당안학(檔案學)이 형성되었다.<sup>56)</sup> 이와 같은 행보로 중국의 당안학은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당안 관련 기구와 당안관의 급속한 증가에 전문 인력을 충당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중국공산당은 중국런민대학에 전문적인 기록학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1952년 11월 1년제 전문 기록반을 열게 되었다.<sup>57)</sup> 하지만 전문 기록반이 성립한 초기에는 전문

53) 강대신, 박지영, 「중국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4권 제2호, 2004, p.94.

54) 신 중국 성립(1949년) 이전의 당안.

55) 기관(機關)이란 각급 당(黨) 관련 기관, 정부기관, 군 기관과 인민단체(人民團體)를 뜻한다. 기관 당안은 이들 기관에서 생성하는 당안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 당안의 상대어로 쓰였다.

56) 풍혜령(馮惠鈴), 「중국 당안학의 현황 및 발전추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1호, 2001, p.40.

57) 이후 1년 코스였던 중국런민대학 당안전수반(專修班)은 1955년 5월 중국 최초의 당안과로 거듭나게 된다.

교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재도 없었다. 그리하여 소련으로부터 기록학을 도입하게 된다. 당시 소련의 경험을 배우자는 분위기 속에서 조언라이(周恩來)의 주선으로 소련의 기록학 전문가 세레지네프(M.C.Цези́нѣв)<sup>58)</sup>를 초빙하게 되었다.

중국이 이 시기에 소련의 경험을 배우고자 했던 것은 소련이 동일한 사회주의 체제였고, 또한 냉전시기인 이 때 사회주의 국가 이외에는 교류가 쉽지 않았던 것이 그 배경이다. 세레지네프의 지도를 받은 교원 중 우바오캉(吳寶康)은 기록연구실의 주임을 맡고<sup>59)</sup> 이후 중국런민대학의 당안학과 초기의 주임교수가 되었다. 이 시기 당안반 첫 1년의 교육과정은 세레지네프를 초빙하여 강의를 하였으며 4개의 과목은 소련의 교재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였다.<sup>60)</sup>

중국 최초의 당안학과에서 교육과정이 시작되고 소련으로부터 기록학을 도입하게 된 배경의 중심에는 소련의 역사학자 세레지네프가 있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소련을 답습하면서 기록물관리 제도까지 받아들였다. 사회주의에서 기록물을 당 선전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소련과 중국의 기록물 활용은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중국은 한국처럼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기록물 편찬의 전통이 있었으며, 이런 전통이 사회주의 체제의 기록물 활용과 접목되면서 ‘편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58) 소련의 기록학자, 문헌편찬학자. 1941년 모스크바대학 역사과 졸업, 1946년 10월 혁명 중앙국가기록보존소 과학편찬연구처에 고급연구원으로 들어감. 1950년 모스크바 역사기록대학원에 입학, 박사학위 취득 후 교수로 임명됨. 1952-55년 중국런민대학에서 강의. 귀국 후 1957년 모스크바 역사기록학원에 문헌편찬학연구실을 창건하고 주임을 맡음. 이어서 모스크바 역사기록학원 부원장 16년간 역임. 140여편의 논저가 있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대표작은, 『소련문헌편찬학의 이론과 방법』. 바이두 백과사전 참조 [<http://baik e.baidu.com/link?url=tPddpLyElmHfpoO77nB54jmFURcUBpu9lxi8KgEs2WYsBUE3sUUqW37Vd4bfR31h> cited 2014. 5. 20].

59) 이승휘, 「중국의 아키비스트 양성제도: 中國人民大學檔案學院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창간호, 2000, pp.203~205.

60) 李丹, 「吳寶康檔案編研的利用思想演變研究」, 랴오닝대학 석사학위청구논문, 2012, p.9.

## 2) 당안 관리 규정 중 편연

앞의 1절에서 중국에서 현대적 당안 관리가 어떻게 시작되고 편연이 얼마나 중요시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당안학에서 중시하는 편연은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편연이라는 것을 중요시하고는 있지만 생각에서만 머무를 수도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중국에선 이에 대한 우려는 보이지 않는다. 당안 관리 규정에 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규정을 찾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당안 관리에 관한 법령인 「중화인민공화국당안법(中華人民共和國檔案法, 이하 당안법)」과 「중화인민공화국당안법실시관법(中華人民共和國檔案法實施辦法, 이하 실시관법)」, 「당안관업무통칙(檔案館工作通則, 이하 업무통칙)」, 「기관 당안 관리 업무제정(건설)규범(機關檔案工作業務建設規範, 이하 업무제정규범)」까지 총 4가지 법규를 훑어보았다. 이 중에서 당안의 편연 관련 조항을 밝혀하였다.

1987년 제6회 전국인민대표회의(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 22차 회의에서 통과된 「당안법」은 1988년에 공포·시행되었다. 「당안법」은 1996년 중화인민공화국 제8회 제12차 회의에서 수정에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기록물 관련 법령 제정에 있어서 국내보다 10년이나 빠른 모습을 보였다. 「당안법」은 당안의 관리와 수집, 정리 작업과 효과적인 당안의 보호·이용방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최상위 법이라고 할 수 있다.<sup>61)</sup> ‘제1장 총칙, 제2장 당안 기구 및 직책, 제3장 당안의 관리, 제4장 당안의 이용과 공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으로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구성을 보면 <표4>와 같다.

---

61) 第一條 爲了加強對檔案的管理和收集, 整理工作, 有效地保護和利用檔案, 爲社會主義現代化建設服務, 制定本法. 당안법 제1조.

<표4> 「당안법」의 주요구성<sup>62)</sup>

장(章)	조(條)	주 요 내 용
제1장	제1조~제5조	[총칙] 서무, 인사, 예산, 회계, 용도, 재산 및 물품 관리, 청사유지
제2장	제6조~제9조	[당안 기구 및 직책] 당안 행정 업무 담당기관 및 그 역할, 당안담당직원 자질
제3장	제10조~제18조	[당안의 관리] 당안의 수집 및 당안의 과학적 관리와 이용 편의성, 당안의 매매 및 출국 금지
제4장	제19조~제23조	[당안의 이용과 공포] 당안의 이용범위 및 공개기한(형성된지 30년 이후), 당안의 활용(연구인력 배치)
제5장	제24조~제25조	[법률 책임] 당안 행정 관리부문에 대한 책임 및 당안의 불법 이용
제6장	제26조~제27조	[부칙] 실시 시기 및 방법

이중 당안의 편연은 제 4장 당안의 이용과 공포의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당안의 편연과 관련된 조항은 제23조로 다음과 같다.

제23조 모든 당안관은 당안의 연구와 정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응당 연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다양한 범위 내에서  
계획성 있게 당안 자료를 편집하고 출판하여야 한다.<sup>63)</sup>  
 (밑줄 필자)

당안의 연구와 정리를 위한 연구인원의 배치를 법률 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안의 생산과 등록 정리뿐만 아니라 편집하고 출판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범위 내에서의 계획성 있게 당안 자료를 편집, 출판하도록 명시하여 이를 각급 당안관(실)의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

62) 강대신, 박지영, 같은 글 p.96.

63) 第二十三條 各級各類檔案館應當配備研究人員，加強對檔案的研究整理，有計劃地組織編輯出版檔案材料，在不同範圍內發行。

였다. 「실시판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더 구체화되는데, 제23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3조 ‘당안법’ 제23조가 칭하는 당안의 공포(公布)는 다음의 형식으로 먼저 출판 발행되어야 한다. 1. 신문, 간행물, 도서, 음성이나 동영상, 전자출판 등의 발표, 2.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3. 정보포탈; 4.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시간에 낭독, 방송, 5. 당안 사료, 자료 혹은 발췌회편, 6. 당안 복제물의 공개 판매, 배포 혹은 광고, 7. 당안 혹은 그 복제품의 전시나 진열<sup>64)</sup>(밑줄 필자)

「실시판법」 제23조는 당안이 공개되어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당안사료, 전문(全文) 혹은 발췌회편(摘錄匯編) 등의 도서나 전자출판, 당안 복제물을 판매, 그리고 전시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안관에서 당안을 공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안의 공포는 위에서 설명한 「당안법」 제23조에서의 연구인원에 의한 편연 이후 행해지는 것으로 「실시판법」에서 연구인원의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업무통칙」은 1983년 4월 26일 국가 당안국이 공포하고,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 당안관의 사업적 건설을 위해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 국무원과 관련된 당안 업무를 결정, 지시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된 통칙이다. 제3조를 보면 당안관의 기본적인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64) 第二十三條 《檔案法》第二十二條所稱檔案的公布，是指通過下列形式首次向社會公開檔案的全部或者部分原文，或者檔案記載的特定內容：（一）通過報紙，刊物，圖書，聲像，電子等出版物發表（二）通過電台、電視台播放，（三）通過公眾計算機信息網絡傳播，（四）在公開場合宣讀，播放，（五）出版發行檔案史料，資料的全文或者摘錄彙編，（六）公開出售，散發或者張貼檔案複制件，（七）展覽，公開陳列檔案或者其複制件。

제3조 당안관의 기본적 임무는 당과 국가 역사의 진실된 면모를 수호한다는 전제하에 당과 국가의 유관 자료를 집중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당안의 온전함과 안전을 유지하며,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위하여 당안을 이용<sup>65)</sup>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당안관은 아래의 업무를 진행한다. : 1. 당안의 이관과 수집 ; 2. 당안의 과학적 관리 ; 3. 당안 이용업무 전개 ; 4. 당안 사료의 편집, 출판 ; 5. 역사 편찬 업무 참여.<sup>66)</sup>  
(밑줄 필자)

당안관의 업무 5개 중에서 4항과 5항의 두 가지로 편연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당안관에게 역사연구 활동에도 상당부분 책임을 부여함을 알 수 있다.

위의 항목만으로도 중국정부가 기록물 편연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지지만 특히 제4장 당안의 이용 부문에서 제22조가 당안관의 적극적인 기록물 편연을 강조하고 있어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2조 당안관은 필수 편집 당안 문건 회편과 기타 참고자료를 근거로 하여 적극적으로 당안 사료의 연구와 편찬 업무를 담당하고, 담당 책임자의 비준을 얻어 당안 문건을 공표해야 한다. 성(省)급 이상과 조건이 되는 당안관은 편연기구를 설립해야 하고, 계획적으로 각종 당

65) 당안의 이용 : 혹은 “당안 이용 제공(檔案提供利用)”, “당안 이용 공작(檔案利用工作)”이라고도 한다. 소장하고 있는 당안을 일정한 방식을 통해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여 서비스하는 업무. 그 방식은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다. 1. 당안 원건을 제공하는 방식, 2. 당안의 복제본을 제공하는 방식, 3. 당안 문건의 회집(彙集)이나 당안사료회집(檔案史料彙集)을 편찬 출판하는 방식, 4. 당안 내용을 이용하여 서면자료를 편찬하는 방식, 5. 당안으로 인해 증빙되는 사실의 확인증명을 발급하는 방식 등이 있다.

66) 第三條 檔案館的基本任務是在維護黨和國家歷史真實面貌的前提下，集中統一地管理黨和國家的檔案及有關資料，維護檔案的完整與安全，積極提供利用，為社會主義現代化建設服務。檔案館進行下列工作：1. 接收與征集檔案，2. 科學地管理檔案，3. 開展檔案的利用工作，4. 編輯出版檔案史料，5. 參與編修史、志的工作。

안 사료 회편을 편집·출판해야 한다.<sup>67)</sup>(밑줄 필자)

위의 조항을 보면 중국의 기록물 편연에 관련된 법률 조항은 구체적이고 강제성을 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안관의 구체적 급수를 언급하며 편연 기구의 설치에 대한 강력한 규정을 두고, 편집·출판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제정규범」은 국가 당안국에서 1987년 12월 4일에 공포한 것으로 각 민주당파(民主黨派)에 속하는 기관, 중국인민해방군(中國人民解放軍), 각급 사업단위(事業單位)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각자의 규정을 만들어 당안 업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sup>68)</sup> 이 규범에서 기록물의 편연과 관련한 규정은 제6조 당안의 이용 부분에 드러나 있다.

## 6. 당안의 이용

6.1 기관의 당안 인원(檔案人員)은 소장하고 있는 당안의 정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고, 기관 내의 각 항 업무에 필요로 하는 당안의 이용에 대해 주도적으로 이해하여,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3 기관의 당안 부문(檔案部門)은 당안 사료(檔案史料)에 대한 편찬 작업을 전개하여, 유관부문과 적극적으로 배합하여 전종 간개(全宗紹介)·조직 연혁(組織沿革)·대사기(大事記)·기초통계회편(基礎統計彙編)·발문회편(發文彙編)·진제문건회편(專題文件彙編) 등을 편찬한다.<sup>69)</sup>(밑줄 필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아키비스트가, 그리고 기록물을 관리하는

67) 第二十二條 檔案館應積極開展檔案史料的研究和編纂工作，根據需要編輯檔案文件彙集和其他參考資料，經主管領導人批准可公布檔案文件。省級以上和有條件的檔案館，要設立編研機構，有計劃地編輯出版各種檔案史料彙編。

68) 업무제정규범 부칙.

69) 6. 檔案的利用 6.1 機關檔案人員要熟悉所藏檔案的情況，主動了解機關各項工作對利用檔案的需要，積極做好提供利用工作。6.3 機關檔案部門應開展檔案史料的編研工作，積極配合有關部門編寫全宗介紹，組織沿革，大事記，基礎數字彙編，發文彙集和專題文件彙集等。



기관이 적극적으로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정보공개 법령<sup>70)</sup>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기록물의 공개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볼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안의 편연 활동을 당안 관리 인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베이징시 당안관의 『베이징 당안 사료』

중국의 당안 관리 체계는 “통일영도(統一領導), 분급관리(分級管理)”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국무원(國務院) 산하 국가당안국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별 등급에 따라 당안국이라는 행정기구를 두어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통일영도(統一領導), 실제 당안을 이관 받아 정리·보관·활용하는 당안관이라는 관리 기구를 두어 현실 여건에 맞게 분산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분급관리(分級管理)).

당안관은 그 소장 당안의 성격에 따라 크게 4종류로 구분하는데 분야와 형태를 망라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綜合) 당안관, 특수한 주제를 가지고 당안을 관리하는 전문 당안관, 국가중앙기관의 주요 부처의 당안을 중점 관리하는 부문(部門) 당안관, 국영기업이나 연련이 오래된 중소기업 등의 당안을 관리하는 기업 사업단위 당안관으로 나뉜다.<sup>71)</sup> 중국의 당안관은 국내의 실정과 직접 비교할 경우 종합 당안관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종합 당안관이 국내의 경우로 빗대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며, 나머지의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중국의 국가 종합 당안관은 2012년 기준으로 전국 각 성(省), 시(市), 구(區), 현(縣)에 3,219개가 설치되어 있다.<sup>72)</sup> 이 중에서 성(省)이상 급 당안

70) 「정부정보공개조례(政府信息公開條例)」는 2007년 4월 5일 정식 공포되었으며,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부정보공개조례 제38조.

71) 강대신, 박지영, 같은 글, pp. 97~100.

72)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search/keywordlist2?keyword=%E6%A1%A3%E6%A1%88%E9%A6%86>] cited 2014.5.20.].

관은 전국에 34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도인 베이징의 시정부 당안을 관리하는 베이징 당안관의 사례에 한정하여 살펴보려 한다. 베이징 당안관을 선택하게 된 것은 수도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현재 국내에 제대로 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가 최근 기록관 건립의지를 밝히고 이를 추진하고 있기에 비교한다는 차원에서 선정하게 되었다.

1958년 4월에 개관한 베이징시 당안관은 중공(中共) 베이징 시위원회, 베이징시 인민정부의 직속 문화 사업 기관으로 베이징 지방 정권 조직 기구의 당안을 집중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 국가 종합 당안관이다. 국가 1급 당안관으로서 베이징시 전체의 당정(党政)기관, 대형국유기업의 영구보존문서나 장기보존문서를 수집, 보관, 개발, 이용을 책임지고 있으며 동시에 시정부의 정보공개열람 작업 또한 담당하고 있다.<sup>73)</sup>

베이징시 당안관은 19처, 2부, 1위원회, 1회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 연구처는 조사연구, 전 시의 당안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글 작업을 총괄하며, 당안 선진, 당안 통계, 정보를 담당하고, 당안 이론과 정책 연구를 진행한다. 과학 교육처는 전 시의 당안 과학 연구 관리와 업무지도 및 당안 교육 관리와 업무지도, 당안 전공 기술 직무 자격 평가 심사 업무를 책임진다. 정리 편목처는 관 소장 당안 자료의 정리와 감정, 그리고 정보 공개 검색 체계를 만들고 관리한다. 이용처는 당안 소장 당안 자료의 이용 서비스를 책임지고 정부 정보 공개 열람 응대 업무를 담당한다. 전람 진열처는 관 소장 당안 자료 연구와 전시를 기획한다. 위의 부서들은 언뜻 보면 당안 편연과 관련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에 설명한대로 다소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베이징 당안관에서 당안의 편연과 가장 관련 있는 부서는 전람 진열처, 당안 문헌 편연부(檔案文獻編研部)와 『베이징 당안 사료』 편집부(『北京檔案史料』編輯部)일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판과 관련한 편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당안 문헌 편연부와 베이징 당안 사

73) 政务信息 > 档案馆室工作 > 各省档案馆简介 [[http://www.saac.gov.cn/xxgk/2011-12/27/content\\_12850.htm](http://www.saac.gov.cn/xxgk/2011-12/27/content_12850.htm) cited 2014.5.20.] 《中国档案报》2010年1月14日 总第1952期 第二版 [<http://www.bjma.gov.cn/Index/dajg/bjsdajg/bjsdajgdd.ycs?GUID=104045> cited 2014.5.20.].

로 편집부가 그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다.

중국의 편연제도는 편연 관련부서를 두 부서로 두어 한 부서는 당안의 편연 총괄을 다른 한 부서는 특정 출판물의 편집만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베이징 당안관에서 편연 관련 부서를 굳이 두 개의 부서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선 이는 표면적으로 본다면 장·단기 프로젝트의 차이와 주제의 중요도, 출판물의 성격 차이 때문이다.

당안 문헌 편연부는 선정하는 주제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장기 프로젝트를 주로 맡아 편연 작업을 해오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베이징시 중요 문헌 선편』의 경우만 보아도 1948년부터 1999년의 5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당안을 편연하여 내놓은 성과물로서 지금도 꾸준히 이를 수행하고 있다. 장기로 출판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베이징 당안 사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양이어서 단독 서적으로 출판되는 것이다. 또한 서적의 제목에서도 중요 문헌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주제를 선정하여 편성하게 된다.

당안 문헌 편연부가 최근 발간한 편연 성과물을 살펴보면 2001년 5월에 『베이징시 중요 문헌 선편(北京市重要文獻選編)』 1948년 12월~ 1949년 편을 시작으로 하여, 2006년에 12월에 1964년편까지 출판하였다. 이 도서는 1949년부터 1999년까지의 중요문헌을 출판할 것을 계획하고있다. 이 외에도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문헌자료 회편(北京市人民代表大會文獻資料匯編)』, 『베이징회관 당안 사료(北京會館檔案史料)』, 『베이징 사찰 역사자료(北京寺廟歷史資料)』, 『민국시기 베이핑시 공상 세수(民國時期北平市工商稅收)』, 『베이핑 역대 시정부 회의결의록(北平歷屆市政府市政會議決議彙)』, 『베이핑의 새로운 탄생(北平的新生)』, 『베이징 디탄 사료(北京地壇史料)』, 『베이징, 휘황찬란한 50년(北京輝煌的五十年)』 등 다양한 주제의 편연 성과물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반면 계간지로 출판되는 『베이징 당안 사료』는 한 권에 각각 다른 여러 주제를 싣고 있고 그 주제에 속하는 사료의 양이 보통 4-50페이지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다. 주로 베이징에서 시행했던 단기간의 주요 정책들

이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양이 한 챕터의 분량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 집(輯)에 연속하여 게재하게 된다.

예를 들면 2009년 4집에 「베이징 해방 후 첫 번째 공업 등기(北京解放後的首次工業登記)」라는 주제의 사료조(組)가 실렸는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2010년 1집, 2010년 2집, 2010년 4집까지 나뉘어 실렸다. 그런데 이 정도의 양은 서적으로 구성하기에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서적으로 내야 할 만큼의 중요도를 가진 주제가 아니기에 『베이징 당안 사료』에 나뉘어 실리게 된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파나마 태평양 만국 박람회 출품 분류 강목(巴拿馬太平洋萬國博覽會出品分類綱目)」은 2010년 2집과 2010년 4집에, 「베이징시 사립 중학교 연혁사(北京市私立中學沿革史)」는 2009년 4집, 2010년 1집, 2010년 2집에 나뉘어 실렸다. 『베이징 당안 사료』 편집부는 『베이징 당안 사료』만을 전담으로 발간하는 부서이다. 『베이징 당안 사료』는 개혁개방 초기 발간된 당안 출판물 중 하나로 당안계와 학술계로부터 환영받는 읽을거리였으며, 베이징 당안관에서 발간하지만 전국에서 주목을 받는 편연물로 평가받는다.<sup>74)</sup>

『베이징 당안 사료』 편집부가 발간하는 『베이징 당안 사료』는 우선 일반호와 특집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75)</sup> 특집호는 특정 주분야를 선정하여 그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만 구성된 편으로 일반호에 비해 참여인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페이지 수도 상당하다. 일반호는 보통 10~15사이 개수의 주제가 실리게 되는데 특집호는 그의 2~3배 정도 되는 주제가 실리고 페이지 수도 2배 정도에 달한다.

예를 들면 베이징 당안 사료 2011년 2집(輯)은 ‘베이징의 당 역사 및 당 건립 당안(檔案中的北京黨史與黨建)’이라는 주제로 특집호의 형식으로 발간되었다. 이는 중국공산당 창립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간한 것으로 사료편과 문건편으로 나뉜다. 사료편은 42개조의 진귀한 당안 사료를 담고 있으며 5·4시기 진득수(陳獨秀) 체포 당안을 수록하고 있다.<sup>76)</sup> 최근 발간된

74) 邢永福, 「祝《北京档案史料》创刊20周年的贺词」, 『北京档案史料』2006年 第2輯, p.4.

75) 본 연구에서 베이징 당안 사료의 특징으로 구분하여 언급하는데 편리하기 위해 일반호와 특집호라 임의로 지칭한다.

76) 「『北京档案史料』2011年第2輯内容提要」, 『北京档案』2011年 6期, p.64.

특집호인 2013년 3집은 ‘베이징의 명산 명원(北京的名山名園)’이라는 주제로 발간되었다. 위의 특집호는 수도로서의 베이징이 인문 베이징, 과학기술 베이징, 녹색 베이징 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베이징의 역사가 서려있는 여러 공원 및 식물원 등과 관련한 사료를 싣고 있다. 사료는 10개조, 관련 글은 모두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sup>77)</sup>

<표5> 『베이징 당안 사료』 특집호와 일반호

		특집호	일반호
공통점		문건 회편형과 전문 저술형 두 가지 형식을 적절히 구성	
차이점	주제 편성	행사를 기념하거나 특수한 시기를 겨냥한 특별한 주제	시(市)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
	발간 시기	약 1 년에 한 번	계간지 형식
	내용	500페이지 내외	300페이지 내외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둘의 내용 구성면에서는 문건 회편(文件匯編)형과 전문 저술(專門著述)형의 형태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일치한다. 기록물 편연의 형태를 문건 회편형과 전문 저술형으로 나눈 것은 왕메이(翁梅)<sup>78)</sup>의 분류 방식으로 그는 기층(基層) 당안실의 편연 방법을 다루면서 문건 회편형과 종합 참고형, 전문 저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문건 회편형은 일정한 시간, 특정 주제를 정하여 당안 자료를 뽑아 책으로 구성하여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77) 「『北京档案史料』2013年第3辑『北京的名园名山』内容提要」, 『北京档案』 2013年 10期, p.63.

78) 절강성(浙江省) 당안국 소속.

제공하는 것이다. 문건 회편 형의 특징은 원시성, 계통성, 핵심성(原始性、系統性、針對性)으로 정보량이 많고 편집하기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 저술형은 기관이나 사회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적합한 소장 당안을 선택하여 간략하게 정리, 연구, 분석, 평론을 통하여 만들어낸 일종의 고급 저술성 자료로서 종합성, 연구성이 강하고 난이도가 높다. 따라서 전문 저술형 편연 자료를 담당한 당안 연구자는 비교적 높은 소양과 글재주를 필요로 한다. 전문 저술형 편연물은 먼저 소장 당안의 수량과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당안 자료를 파악한 뒤에 연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선정된 주제는 기관과 사회의 수요에 적합해야 하고, 당안 정보와 사회 수요와의 결합점을 잘 찾아야 한다. 또한 참신하고 심도 있는 주제여야 하며, 당안 자료의 분석과 세세한 연구, 종합적 귀납을 통해 사물 발전의 규율을 찾고, 편연자료에서 실천적 경험과 전문적 이론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sup>79)</sup>

일반호와 특집호 모두 문건 회편형과 전문 저술형의 형태를 모두 구성하고 있지만 문건 회편형의 형태가 더 비중이 크다. 이는 문건 회편형이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서의 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편연의 형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학자와는 다른 아키비스트의 고유 연구 영역인 것이다. 문건 회편형은 상술하였다시피 원시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기록물을 다른 가공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을 실는 것을 뜻한다. 문건 회편에 실린 당안은 본래 기록물 원본과 동등하게 여겨진다고 2장에서도 다루었다. 『베이징 당안 사료』는 이 문건 회편형 부분이 앞부분에 편성되고 분량도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건 회편형의 각 주제 첫 페이지에서는 문건의 생산 시기의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는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 군(群)을 기술(記述)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묶여 있는 기록물 덩어리를 설명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기록물 군의 기술은 검색도구로서 기능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역사적 배경 설명 뒤에는 그 주제에 어퍼한 당안이 있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고 당안의 분류번호(檔号)까지 첨부한

79) 翁梅, 「基层档案室如何开展档案编研工作」, 『浙江档案』2009年 第4期, pp.55~56.

다. 그 뒤에는 당안 원본을 스캔한 형태가 아닌 당안의 내용 그대로를 도서 규격에 맞게 새로 작성되어 실리게 된다.

전문 저술형은 당안의 정리, 연구, 분석, 평론을 통하여 만들어낸 일종의 고급 저술성 자료라고 설명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역사 관련 소논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료가 당안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당안이므로 베이징시 인민정부의 활동으로 연구가 한정된다. 종합성, 연구성이 강하고, 난이도가 높은 편연물이기 때문에 당안관 연구관원의 원고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원고를 받아 출판한다.

한 권의 『베이징 당안 사료』는 통일된 주제로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건 회편형과 전문 저술형 부분에서 일부 연관되는 주제를 끼워 넣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10년 2집과 4집에서는 문건 회편형 중에 「파나마 태평양 만국 박람회 출품 강목(巴拿馬太平洋萬國博覽會出品分類綱目)」편을 실었다. 두 집의 전문 저술형에는 「1915년 파나마 박람회상 중국의 출품 중 수상작 연구(1915年巴拿馬賽會上中國賽品獲獎考)」를 실어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1집에서는 문건 회편형에 「1953년 베이징시 혼인법 관철 운동 사료(1953年北京市貫徹婚姻法運動史料)」와 함께 전문 저술형에 「“인민 내부의 민주개혁”-신중국 제1부 혼인법 관철 전략 안건 분석(“人民內部的民主改革”——新中國第一部婚姻法貫徹策略之個案分析)」를 편성하여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중 파나마 태평양 만국 박람회 출품 강목」편은 문건 회편형 편연이기 때문에 단지 만국 박람회에 어떠한 것을 출품할 수 있는지에 각 분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을 뿐이다. 이 자료는 미국 박람회 총국이 편찬한 것을 그 당시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며, 어떤 것을 출품했는지 어떤 상을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1차 당안 사료일 뿐이다. 하지만 뒷부분의 이와 관련한 연구를 함께 배치함으로써 더욱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베이징 당안 사료』가 다루는 주제는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수행한 업무들이라는 것이다. 『베이징 당안 사료』에서 다루는 주제는 과거의 베이징은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와 관련된 것들이다. 최근 5년간 『베이징 당안 사료』에서 다룬 주제들을 보면 어느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게 선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공업, 교육, 문화, 복지, 외교, 도시 환경, 자연 환경, 환경오염, 실업, 교통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문건 회편형에 구성되는 자료의 형태 또한 다채롭다. 어떠한 주제에서는 기관을 소개하는 연혁사만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sup>80)</sup>, 하나의 보고서만 있기도 하며<sup>81)</sup> 기관에서 훈령을 반포하고, 외주 업체 입찰, 공사 현황 등의 업무의 과정을 상세히 보여 주는 자료도 있다.<sup>82)</sup> 그래도 가장 많은 형태인 것은 다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보고서(報告書)의 형태이다.

## 4. 한국의 기록물관리와 기록정보 서비스

### 1) 기록관리 제도와 기록관리학의 도입

한국은 1945년 해방 이후 즉시 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채 약 3년간 미군정의 통치 하에 국가가 운영되었다. 1948년에는 국회와 행정부가 설립되었으나 사무 관리 기법은 조선총독부의 사무관리 제도를 그대로 활용했다. 1949년에 「정부처무규정」을 만들고, 1950년에 「공문서규정」을 제정하여 공문서의 서식, 작성방법, 유통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조선총독부처무규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정부의 기록관리 제도는 조선총독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sup>83)</sup>

80) 2009年第4輯 北平解放后的首次工业登记 / 梅佳选编, 北京市私立中学沿革史 / 田尚秀选编.

81) 2010年第2輯 1955年北京市河湖状况 / 方立霏 选编.

82) 2009年第4輯 1935年北平市重修明长陵史料 / 方立霏 鹿璐 选编.

83) 이영학, 「한국 기록관리의 사적 고찰과 그 특징」, 『기록학연구』 제34호, 2012.



이 시기 육군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국내에서 가장 큰 행정조직으로 급팽창하였고,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미국의 선진적인 행정관리 기법을 도입하게 된다. 미국 육군의 「육군공문서규정」을 참고하여 독자적인 「육군공문서규정」을 제정하는가 하면 1955년에는 「기록십진분류법」<sup>84)</sup>과 「기록문서분류정리법」을 제정하여 미국군을 모델로 국군 내 행정관리의 효율을 도모하였다. 1950년대 국내는 이처럼 국가행정에서는 일본식으로 육군 내에서는 미국식의 행정·사무 관리 제도로 기록관리가 양분화 되어 있었고 우리의 독자적인 기록관리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그러던 중 1960년대 초반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행정체제가 급속하게 변동하며 군사정권은 새로운 특징을 지닌 기록관리 체제로의 개편을 단행한다. 이 시기에 국가발전담론으로 ‘효율’을 최우선하는 국가 재건론이 형성되고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61년 6월 행정관리연구회를 설치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하여 「정부공문서규정」(1961), 「양식제정절차규정」(1962), 「정부공문서분류표」(1962), 「공문서보관·보존규정」<sup>85)</sup>(1963) 등을 제정하였다. 군사정권 시기의 이러한 변화는 정부수립시기에 조선총독부체제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것과는 달리 미국식 체제를 주체적으로 변용하여 국가 기록관리체제를 수립하여 갔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효율’만을 중시하던 시기여서 업무수행에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량의 기록물을 신속히 처리하는 현용기록물관리에만 치중하였다. 책임행정의 구현 및 기록유산의 전승과 보존이라는 국가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역할을 사회의 기대에 충족시키는 데에는 다

pp.179~193.

84) 십진파일링시스템은 어느 일부분과 개념을 나타내는 숫자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류하는 기술을 말한다. 십진파일링시스템에서 관련된 개념은 종종10개의 단위로 모아지고 그 특이성에 따라 필요한만큼 세분된다. 주요 카테고리(category)는 일반적으로 정수값이다; 제2차와 제3차표제는 연속적인소수점을 사용하여 분리된다. 예를 들어 정책(policy)의 상위계층에 부여되는 숫자는 50~59까지 이다. 근로자의 부가급부(fringebenefits)에 관한 정책이 55라면 그 하부영역에 속하는 출산휴가 정책(thematernitypolicy)은 55.2가 될 것이다. Richard Pearce-Moses,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Archival Fundamentals SeriesII』, Chicago:SAA, 2005, p.108.

85) 총 6장 3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구성은 총칙, 편철 및 보관, 인계 및 이관, 보존, 대여, 폐기 등이다. 공문서보관·보존규정(제정 1963.12.16, 각령 제1759호).

소 소홀하였던 것이다.<sup>86)</sup> 이 시기 기록관리의 목적은 행정적 편의와 실용성 그리고 효율성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기록관리는 효율적 행정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여 진다.

1969년에는 정부기구의 공공기록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활용 목적으로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하게 된다. 정부가 영구보존기록을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과 기록관리를 위한 단독 기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기록보존소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으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관의 장은 퇴직 전 잠시 머무르는 자리였기 때문에 공공기록을 효과적으로 이관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sup>87)</sup> 또한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하지만 기록물을 대중에게 공개·활용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그 동안 각 기관의 곳곳에 적체되어 있던 기록물을 정리<sup>88)</sup>하면서 영구 및 준 영구 기록물을 한 곳에 모아 보존하려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한 것이다. 보존하고 있던 기록물을 기록학에서의 정리(整理)<sup>89)</sup>가 아니라 처분을 위한 과정 이었던 것이다.

한편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의 성장을 배경으로 기록보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비로소 국내에서도 공공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1991년에는 공공 기록관리에 관련된 제반 규정이 「사무관리규정」으로 통합되는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까지도 기록관리는 행정업무를 위한 도구이자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었으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전산망에 의한 문서발송 근거 마련과 문서관리 체계화 및 중요기록물 멸실 방지를 위한 등록제도의 도입이었다. 1992년에는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기록물 평가제도의 개선을 꾀하였

86) 이상훈, 「한국정부 수립 이후 행정체제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48년~64년)」, 『기록학연구』 제21호, 2009, pp.216~236.

87) 이영학, 같은 글. pp.240~241.

88) 1962년과 1968년에 대대적인 '영구보존문서정리'가 있었다. 하지만 62년에는 이는 48년부터 62년까지 각 기관에 적체되어 있던 공문서들을 '행정사무적'측면에서 평가하여 처리하는 작업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 '보존문서정리작업'은 주요 기록물의 폐기와 멸실로 이어졌다.

89) 기록을 출처 주의와 원질서 존중 원칙에 따라 계층별로 조직화하는, 지적·물리적 처리 과정을 말한다.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8, p. 35.

다.<sup>90)</sup> 1996년 11월에는 한국역사연구회가 “우리나라 기록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기록관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법률부터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던 중 1997년 1월부터 정부역사기록관은 ‘기록보존법 연구 작업단’을 구성하여 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로 1998년 ‘기록보존법 기본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9월부터 10월까지 법제처 법률안 심사결과 명칭이 조정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99년 1월 29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법률 제 5709호로 공포되었다.<sup>91)</sup>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시행과 함께 과학적인 관리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광복 이후 정부수립 시기부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국내 기록관리 제도를 살펴보면 이전의 기록관리는 현재 「기록물관리법」에서 추구하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정되고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록물관리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밝히다시피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이다. ISO 15489의 기록관리에 대한 언급<sup>92)</sup>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기록물관리법」 이전의 기록관

90) 서혜란, 「한국 공공기록관리 정책의 연대기적 검토」,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9권 제2호, 2009, pp.192~194.

91) 하정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한국 기록관리체계의 특징 및 개선방향 - 생애주기 및 연속체 이론의 시각에서」, 2005,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8.

92) ISO 15489 정보와 도큐멘테이션: 기록관리 Part 1 일반사항 3.16 기록관리: 기록의 생산·인수·유지·사용·처분을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 영역으로서, 업무 활동과 처리행위에 관한 증거와 정보를 기록형태로 획득·유지하는 과정을 포함. 4. 기록관리의 이점: 기록관리는 기록관리자 및 업무 활동 중에 기록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실무를 관장한다. 조직에서의 기록관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정책과 표준 정립 b) 책임과 권한의 부여 c) 절차와 지침의 수립과 공표 d) 기록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 제공 e) 기록관리를 위해 전문화된 시스템을 설계·실행·관리 f) 기록관리를 업무시스템과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 기록은 가치 있는 자원이고 중요한 업무 자산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조직과 사회가 업무활동의 증거로서 기록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핵심적이다. 기록관리 시스템은 현재 및 미래의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명 책임성을 분명히 해줄 뿐 아니라, 후일의 활동과 업무 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업무 활동에 대한 정보원을 만들어 준다.

리는 상술하였다시피 일제의 제도를 그대로 표방한 것으로 우리만의 주체적인 제도가 아니었으며, 우리만의 제도로 발전되었을 때는 단순히 행정효율화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었다. 기록관리의 목적은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sup>93)</sup>과 함께 기록에 담겨진 지식이 업무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통되어야 하는 것인데, 업무자를 위한 기록의 관리와 기록정보의 활용만이 이루어 질 뿐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거나 재가공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기록관리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키비스트의 기록물 편연을 통한 기록물의 공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인식 속에서 기록관리 제도가 대중들에게 기록을 공개하고 활용하는 방면으로, 즉 아키비스트의 적극적인 편연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구상되지 못하였고 아키비스트에 대한 필요나 역할에 대해서 재고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3장의 1절과 본 절에서의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국가의 기록관리 제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구 소련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일제의 잔재에 머물다가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기록관리가 본격화 된 시점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전통에 기반한 기록관리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반면 중국은 다른 국가의 영향을 받아 기록 전통을 편연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발전시켰다. 사회주의와 기록 전통이 결합된 편연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sup>94)</sup>

93) 개인, 조직 또는 시스템에 책임이 부여된 활동의 결정에 대하여 주로 기록을 통해 답변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 오늘날 기록에 의한 설명 책임은 공적 영역의 기록 관리 행정의 중심 목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러한 중요성에 의해 기록관리 시스템 설계 시 시스템의 설명 책임은 시스템을 평가하는 중요 기준이 되었다. 설명 책임이란 기록에 의해 제3자에게, 또는 법령에서 지정한 기관에게 업무 또는 행정 수행의 전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록은 설명 책임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확하고 완전하게 생산되어야 하며, 공공 기관은 투명 행정과 책임 행정의 근거를 기록에 의한 설명 책임을 통해 충족시킬 의무를 갖는다. 한 조직이나 기관에서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된 기록은 법적 · 증거적 효력을 갖는다.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사전』, 2008, p.148.

94) 「당안관업무통칙(檔案館工作通則)」 제3조 당안관의 기본적 임무는 당과 국가 역사의 진실된 면모를 수호한다는 전제하에 당과 국가의 유관 자료를 집중 통일적 관리하고, 당안의 온전함과 안전을 유지하며,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용을 제공한다. 第三條 檔案館的基本任務是在維護黨和國家歷史真實面貌的前提下, 集中統一地管理黨

## 2)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서비스

국내의 기록물 편연 성과를 살펴보기 전에 이를 규정하는 국내 법률에 대해 먼저 볼 필요가 있다.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온 국내의 기록물 관련 법령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과 동 법령의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통해 기록물의 편연의 내용과 주체, 편연의 범위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공공기록물법」의 주요 구성부분을 보면 <표6>과 같다.

---

和國家的檔案及有關資料，維護檔案的完整與安全，積極提供利用，為社會主義現代化建設服務。檔案館進行下列工作。

<표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구성

장(章)	조(條)	주 요 내 용
제1장	제1조~제8조	[총칙] 목적, 적용범위, 정의, 공무원의 의무, 기록물관리의 원칙,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제2장	제9조~제14조	[기록물관리기관] 중앙, 헌법,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자료관, 특수자료관
제3장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4장	제16조~제18조	[기록물의 생산] 기록물 생산의 원칙, 의무, 등록·분류·편철 등
제5장	제19조~제30조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의 관리, 전자기록물의 관리,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간행물·시청각·행정박물의 관리,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기록물의 회수·폐기,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기록매체 및 용품,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제6장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였으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삭제(2007.7.28.)
제7장	제31조~제34조	[비밀 기록물의 관리] 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관리
제8장	제35조~제38조	[기록물 공개 및 열람]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공개, 비공개기록물의 열람, 기록물공개심의회
제9장	제39조~제42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기록물관리의 표준화, 표준의 제정절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교육·훈련
제10장	제43조~제46조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변동사항 관리, 보존·관리,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제11장	제47조~제49조	[보칙] 비밀누설의 금지,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위임규정
제12장	제50조~제53조	[벌칙] 기록물 무단과기, 무단 국외 반출, 단순 신고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징수

<표7>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의 관리기관, 기록물의 생산, 등록·분류·편철 등의 상세관리부분, 비밀기록, 기록물의 공개 열람까지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기록물의 편연에 대한 역할이나 범위에 대해 규정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조항으로 먼저 제4조의 ‘공무원의 의무’<sup>95)</sup>를 꼽을 수 있다. 제4조는 기록물을 생산하는 주체와 관리하는 주체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4조(공무원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밑줄 필자)

1항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의무로 기록물을 보호·관리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국민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정운영에 대해서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국정운영을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레 생산되는 기록물을 제대로 생산 및 등록하고 보호·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은 공적업무의 증거인,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를 가진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은폐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은 기록을 생산하는 주체로서 등록과 보호·관리의 의무까지 부여되는 것이다. 제4조 2항에서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여 기록물 공개에 있어서의 적극성을 강조하였다. 정보의 이용 방식에 있어서 이용자의 신청에 응하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 또는 기록물관리기관이 공개·활용을 위해서 노력해야한다고 함으로써 능동적인 방

---

95) 공무원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가 당연히 이행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지태, 『기록관리법령 따라 읽기』, 서울: 선인, 2008, p.75.

향으로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sup>96)</sup>

또한 기록물 공개의 주체를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설정하여 현용/준 현용/비현용의 모든 단계에 있는 기록의 공개와 활용을 장려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의 실행방법에 있어서 규정해야 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는 관련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쉽다.

구체적으로 기록물의 편연을 규정한 조항은 없지만 특정 기록물관리기관의 편연 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찾을 수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38조의 2를 살펴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의 정리, 기술, 편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8조의 2(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  
(整理)·기술(記述)·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2.4](밑줄 필  
자)

그런데 이 조항은 법률 제정당시부터 있던 조항이 아니라 법률 시행 10여년 후에 신설된 조항이다. 제정 초기부터 당연히 중요시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10년 후가 되어서 신설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동안의 기록물 활용에 대한 소홀함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기록물의 활용보다는 수집·이관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던 모습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늦게나마 기록물의 편연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그 범위를 어느 정도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38조의 2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편연과 관련된 내용은 「공공기록물법」의 제38조의 2단 한 조항뿐이다.

---

96) 박지태의 같은 책, p.78



그리고 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아쉽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기 전의 각급 기록관에서도 기록물의 편연을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장에서 살펴본 중국의 경우에는 「당안법」 제23조에서 ‘모든 당안관’의 당안 편연을 언급하였고 이를 「실시판법」과 「업무통칙」을 통해 각급 기관에서 행해져야할 구체적인 기록물의 편연 활동으로 규정하여 이를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아직 그 단계까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서 중국과 한국의 기록물 편연에 대한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제38조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이라고 규정하긴 했지만 실제 국내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그리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이 많지 않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대통령기록관의 4가지 유형이 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국회도서관,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헌법재판소 사무처 심판사무국(심판사무2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정하고 있다.<sup>97)</sup> 그 중 헌법기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의 의무는 아니며, 만약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 소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sup>98)</sup> 그리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구의 자치단체는 의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육청에는 이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자체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한 사례는 아직 없고, 교육청은 그나마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 하다. 이렇게 보면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 헌법기관의 각 기록물관리기관, 지방 교육청, 대통령 기록관 정도이다. 헌법기관의 기록물관련 규칙에서는 어느 한 곳도 기록물의 편연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았다.<sup>99)</sup> 따

97) 「국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조, 「법원 기록물관리 규칙」 제4조,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 규칙」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조.

98) 「공공기록물법」 제10조 제1항.

99) 규정에는 없지만 각 기관의 필요에 의해 기록물의 편연 관련 업무를 한다고 명시한 기관

라서 국내에서 기록물의 편연 활동을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뿐인 것이다.

국내의 기록관리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에서는 기록물의 편연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기록물의 편연이라는 것이 규정된 대로만 수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규정 시행 전부터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국내에서 기록물의 편연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앞장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면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사례를 볼 것이다. 국내는 중국처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의 편연 활동을 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국내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우선 국가기록원의 조직을 살펴보면, 3부, 3관, 17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1>과 같다. 3개 부서 중에서 기록물의 편연과 관련된 부서는 ‘기록 정보 서비스부’이다. ‘기록 정보 서비스부’ 내에는 <그림1>에서 보듯이 3개의 과가 존재하는데 공개 서비스과, 기록 정보화과 그리고 기록 편찬 문화과이다. 여기서 기록 정보 서비스란 넓게는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이용자와 기록을 연결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sup>100)</sup>,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와 시설 그리고 잠재적 이용자에게 기록관 및 소장 기록물을 알리는 활동 전반을 포함한다.<sup>10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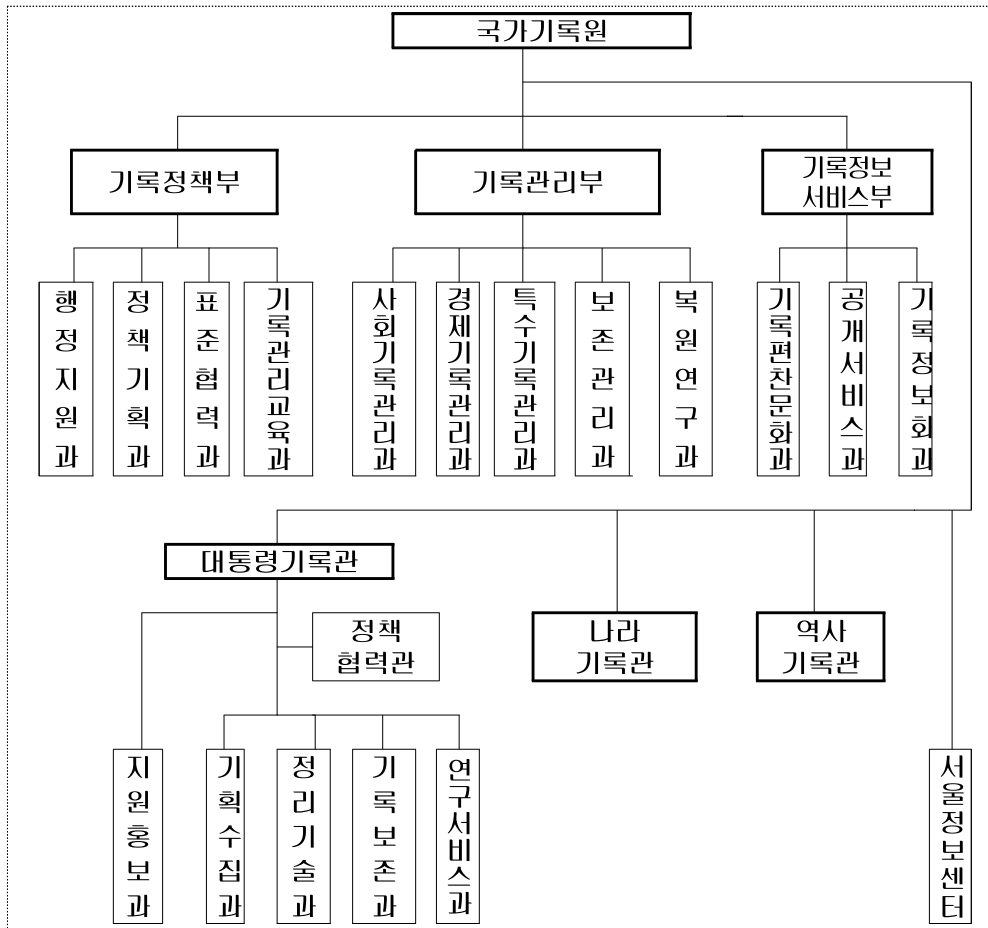
---

도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은 다음을 주요 업무로 명시하였다. 기록물관리에 관한 각종 정책수립,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개정 및 기록물보존서고 관리, 기록물 수집·보존·폐기 및 기록물 DB사업, 선거정보도서관 및 기록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선거사·정당사·선거관리 위원회사 등 편찬, 선거·정당자료 수집 및 정리, 기록영화제작·사진공모전에 관한 사무,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심판사무국의 심판사무2과가 기록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 업무만을 하고, 심판 자료국의 자료 편찬과에서 헌법재판소공보, 헌법재판소판례집,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헌법논총 등 각종 책자 및 자료의 발간업무를 담당한다.

100) Mary Jo Pugh, 설문원 역, 같은 책, p.23.

101) 김건, 김수정, 윤은하, 한희정,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 13권 제3호, 2013, p.200.

<그림1> 국가기록원 조직도<sup>102)</sup>



기록 정보 서비스부는 2007년 신설되고 이때부터 기록 정보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이전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었다. 참여정부 기록관리 혁신 국가기록혁신 아젠다 9개 중 하나가 ‘공공기록 편찬 및 서비스의 확대’로 설정되면서 공공기록을 콘텐츠화 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록물의 활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록물의 관리가 허술하고 공공기록물을 편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sup>103)</sup>

102)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국가기록원 소개 중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103) 감사원이 발표(‘05.10.28)한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실태·감사결과’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여타 기관간의 연계 활용시스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간행한 『資料大韓民國史』 제1-제18권까지 수록한 총 21,615건 가운데 신문에서 발췌한 자료가

이에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가 함께 공공기록의 자원화라는 주제로 공공기록의 편찬과 서비스의 확대를 꾀하였다.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2007년 4월부터 ‘나라기록포털’을 구축하여 정부 기능분류에 따라 28개 국정분야(공공질서, 과학기술, 통일, 국방 등) 및 11개 주제유형별(정책·제도, 인물, 사건 등)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통합검색 체계를 마련하여 검색서비스를 강화하였다.<sup>104)</sup> 또한 다양한 기록정보의 활용을 위해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기록 정보 서비스부 중에서 기록물의 편찬과 가장 관련이 깊은 과는 기록 정보 서비스부 중에서도 기록 편찬 문화과와 기록정보화과이다. 공개서비스과는 기록물 기술(記述)제도의 운영 및 소장 기록물의 정리·기술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물의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기술은 기록을 위한 검색 도구나 기타 접근 도구를 생산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물을 의미하기 때문에<sup>105)</sup> 적극적인 기록물의 활용과는 거리가 있다.

기록정보화과는 기록물 정보화에 대한 제도·정책·기획·예산 수립, 기록물의 전자적 활용을 위한 매체 수록, 기록물 콘텐츠 구축 등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운영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명칭 그대로 이용자들이 기록물을 좀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보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부서이다. 기록 편찬 문화과는 1. 기록물 관련 편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기록물 관련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제작, 3. 기록물 관련 각종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 기록문화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시책 개발, 5. 대국민 기록관리 의식개혁프로그램의 추진, 6. 기록물 홍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및 추진, 7. 주요 기록물의 전시·시사회 및 방문객 견학 프로그램 기획·운영, 8. 소식지·홍보책자 등 홍보물의 제작·발간 및 배포, 9.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고 명시하

---

92.9%인 20,086건이고 정부 등의 공문서 인용률은 극히 저조한 것은 공공기록의 접근과 활용이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백서7)』, 2005, p.110.

104) 국가기록원, 『2007 기록관리 혁신포럼. 참여와 시스템에 의한 기록관리 혁신』, 2007, p.17.

105) 『기록학용어사전』 pp.63~64.

고 있다.<sup>106)</sup> 그런데 두 부서가 공통적으로 담당하는 업무가 기록물 콘텐츠와 관련한 업무이다. 기록정보화과에서는 기록 콘텐츠 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기록 편찬 문화과에서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sup>107)</sup>

여기서 기록정보 콘텐츠, 기록물 콘텐츠, 기록 콘텐츠 등 여러 가지 명칭이 등장해 혼란스럽게 한다. 국가기록원은 “기록정보 콘텐츠란 열람 요청이 많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록물의 특성을 이해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의 생산 배경 및 소장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라고 설명한다.<sup>108)</sup> 김해인은 그의 논문에서 “기록 콘텐츠는 기록과 콘텐츠를 합성한 복합어로 기록, 디지털 자원, 콘텐츠의 세계지속성을 포함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09)</sup> 이 단어와 관련해서는 기록학계에서도 아직 공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나라기록 포털에서 제공하는 그대로 기록정보 콘텐츠라고 칭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록물 편연 성과물을 디지털 속성을 띄는 매체로 출판한 것을 기록정보 콘텐츠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따라서 기록물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출판을 하는 기록정보화과와, 지류 매체를 이용하여 출판하는 기록 편찬 문화과 두 부서가 기록의 편연과 관련 있는 부서이다. 본 연구는 두 부서에서 나온 편연 성과물인 기록정보 콘텐츠와 그 외의 서적 출간물을 살펴볼 것이다.

현재 나라기록포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록정보 콘텐츠의 유형은 크게 5가지이다. 첫 번째는 DB콘텐츠로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식민정책 결정문서, 건축설계도면, 판결문 등 국가기록원 소장 주요 기록물군(群)을 대상으로 개요와 생산 맥락 등을 설명하고, 기록물군의 특성에 따른 검색 체

---

106) [[http://www.archives.go.kr/next/organ/divisionInfo.do?org\\_id=1312138](http://www.archives.go.kr/next/organ/divisionInfo.do?org_id=1312138)] cited 2014. 6. 20].

107) 김해인, 「기록 콘텐츠의 서비스 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2, p.56.

108) 기록정보 콘텐츠란 열람 요청이 많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록물의 특성을 이해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의 생산 배경 및 소장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나라기록포털, [<http://theme.archives.go.kr/next/theme/themeMain.do>] cited 2014. 6. 20].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록물 편연 성과물을 디지털의 속성을 띄는 매체로 출판한 것을 기록 콘텐츠 혹은 기록정보 콘텐츠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

109) 김해인 같은 글, p.27.

계와 디지털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컬렉션모음 12개이다. 두 번째는 주제콘텐츠로 6.25전쟁, 4.19혁명 등 특정 역사적 사건과 원자력 진흥, 식량증산 등 정책이나 생활 등에 관련된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해당 기록물의 목록, 디지털 원문과 함께 제공한다. 주제콘텐츠는 현재 31개의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세 번째는 시대·생활콘텐츠로 기록으로 보는 생활사, 연표와 기록, 기념일과 기록 등의 주제로 평소 생활하면서 기록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콘텐츠이다. 우리의 생활과 기록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산되고 삶과 연계되어 있음을 일깨워주는 콘텐츠로 구성되어있으며 현재 총 7개가 제공되고 있다.

네 번째는 교육 콘텐츠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획된 것으로 낱말퀴즈 게임이나 공문서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총 10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국가기록원이 주최했던 각종 전시회의 자료와 현장영상 등 시청각 기록물을 활용하여 사이버 전시회로 구성한 7개의 ‘온라인 전시관’이다. 현재는 총 67가지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매년 새로운 콘텐츠의 추가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sup>110)</sup> 이러한 콘텐츠는 ITC 강국으로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든 쉽게 기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기록물 편연의 좋은 예이다.

---

110) 나라기록포털 위의 페이지 참조 [cited 2014. 6. 20].

## <그림2> 나라기록 포털 기록정보 콘텐츠 - 독도

국가기록원 독도

제1기 '독도=조선 고유영토' 인정기(1905년 이전)

제2기 일제의 조선침략과 1905년 서마해협 고지 (1905년~1945년)

제3기 광복과 '독도=고유영토' 회복기(1945년~)

제1기 '독도=조선 고유영토' 인정기(1905년 이전)

출처: 제1기 문헌, 新東國輿地勝覽(중종25, 1531년), 강원도 우산도-울릉도조

【제1기】 '독도=조선 고유영토' 인정기(1905년 이전)

新東國輿地勝覽(중종25, 1531년), 강원도 우산도-울릉도조

원문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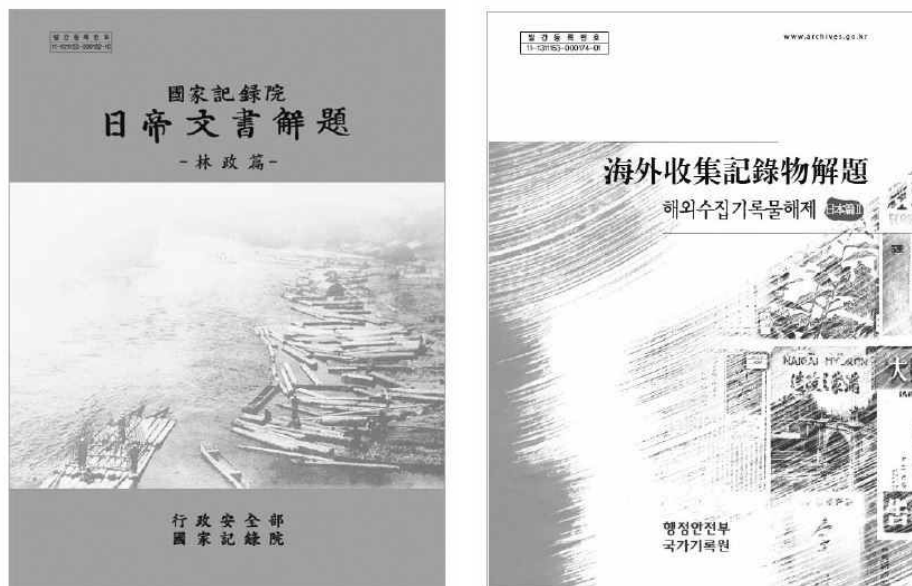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큰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南都尉所民之所行而無所不備... (Original text from the map)

기록 편찬 문화과가 서적으로 출판한 편연 성과물로는 상술한 기록정보 콘텐츠 외에도 서적의 형태로 출판된 해제집이나 목록집이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주요 소장 기록물을 활용한 ‘편찬·콘텐츠’개발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가이드(I,II)』, 『조선총독부 기록물 컬렉션 가이드』, 『해외기록물 컬렉션 가이드(상,하)』는 기록물의 종류와 생산 정보, 행태 및 내용정보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가기록원에서 소장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이관 기록물 컬렉션의 활용을 돕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의 기술서집과 목록집도 발간하여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한 대통령기록에 대한 가이드를 하고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제 식민지배의 실상 파악과 관련 연구에 활용될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일제문서해제』를 편찬해 오고 있다. 조선총독부 기록물 14,000권의 생산 배경 및 과정 등을 정리·분석하여 소개하는 해제집으로 경무편(’00년)을 시작으로 해서, 외사편(’01년), 이재·사계·상공·경금속·연료·노무편(’02년), 학무·사회교육편(’03년), 건축·회계·세무·위생편(’04년), 법무편(’05년), 지방행정편 I(’06년), 지방행정편 II(’07년), 토지개량편(’08년), 수리조합편(’09년), 토목편(’10년), 임정편(’11년)으로 이

어져 총 12책이 간행되었다. 해제집은 기록물군을 유형·기능별로 분류하고 관련 문서 내용의 요약과 역사적 가치 등을 서술하였다. 특히 ‘수리조합’, 토지개량’ 기록물을 통해 관련 사업이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듯이, 해제집은 식민통치 실상 등을 규명하는 데 유용하도록 기획되었다. 또한 근대 건축사와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일제시기 건축도면』의 종합 정리도 진행하여, 학교편(’08년), 고적·관사편(’09년), 법원·형무소편, 의료·세관시설편(’10년), 총독부청사·소속기관·관측소편(’11년)을 제작하였다.<sup>111)</sup>

<그림 3> 일제문서해제-임정편 과 해외수집기록물 해제-일본편Ⅱ



또한 해외에서 수집한 한국 관련 기록물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위해 해제집을 발간하였는데, 『한국전쟁과 중국』, 『1960년대 초반 한미관계』, 『1970년대 한미관계』와 『해외수집기록물해제』, 일본편 I(’10년), 일본편Ⅱ(’11년)이 있다. 수집기록물의 해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충청·경기·강원 등 중부지역의 의병장과 관련된 107명의 판결문을

111) 『국가기록원 발간도서·온라인콘텐츠 가이드북』(2011)과 나라기록포털을 참고하여 정리.



대상으로 원문 및 번역문과 함께 자세한 활동을 소개하는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도 의병활동 I('11년), 의병활동 II('12년)를 발간하였다.

소개한 해제집과 기술서집, 가이드북 등은 중국의 당안의 편연 관점으로 봤을 때,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안 문적(檔案文摘) 회편에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자료집과 해제를 출판하였음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근 10여 년간 발행된 것들이고, 이들은 국가기록원이 단독으로 집필한 것이 아니라 집필자를 공모하여 출판한 것들이라는 점이다.<sup>112)</sup> 또한 이보다 더욱 큰 문제점은 기록물의 편연 활동을 국내에서는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인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서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을 제외하고는 기록물 보존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모든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이 편연활동에 활발한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이다. 국내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구에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경우는 우리로 치면 시, 군, 구에 해당하는 기층(基層) 당안관까지 모두 설치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두 당안의 편연에 힘쓰고 있다는 점은 국내의 상황과 매우 대조된다.

이러한 시점에 국내의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없다. 아키비스트의 일반적인 정의는 1996년 9월 국제기록관리평의회(International Council in Archive) 13차 베이징총회에서 채택한 ‘보존기록물의 관리·보호·보관·보존 및 행정적 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sup>113)</sup>이다. 국내의 법률에서는 이를 기록관리전문요원이라고 칭하여 사실상 보존기록뿐만 아니라 현용기록에 속하는 기록물의 관리자도 동일한 교육과정을 거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선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법률상에서는 기록의 생애주기에 따라 기록물의 보관 장소를 정해두고 있지만 이를

---

112) 국가기록원 소식란에 ‘집필자 공모’라고 검색하면 2003년부터 꾸준히 해제집의 집필자를 공모한 것을 알 수 있다. [<http://www.archives.go.kr/next/news/wordsList.do?page=2&keytype=title&keyword=%EC%A7%91%ED%95%84%EC%9E%90+%EA%B3%B5%EB%AA%A8> cited 2014. 6. 20].

113) 이상민 역주, 「ICA 아키비스트 윤리 규약」, 『기록보존』, 제12호, 1999, pp.263~264.

관리하는 아키비스트에는 따로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sup>114)</sup> 현용 기록과 비현용기록인 보존기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구분을 두지 않는 것은 전자기록시대에 있어서는 ‘생산과 동시에 현용기록이자 역사기록’이 되기 때문에, 기록 가치 변화에 따른 기록물관리 기관의 구분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기록관리 전략들은 기록 생산시점에서 계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단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115)</sup>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록물관리 기관이 생애주기이론에 따라 나뉘어져 있지만 실상 그 안에 업무를 수행하는 이의 조건은 연속체 이론에서처럼 단계의 구분이 모호해 졌다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역할도 기록물관리 기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각 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현용 혹은 준현용 기록물을 관리하는 레코드 매니저(record manager)<sup>116)</sup>의 역할

114) 기록물의 활용 상태에 따라 활용(active), 준활용(semi-active), 비활용(inactive)로 나뉘어 각 기록물은 생산기관-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나뉘어져 관리된다. 하지만 각 기관에서 일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있다.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1.2.22, 2013.3.23, 2013.9.13.>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삭제 <2013.9.13.> 4. 삭제 <2013.9.13.> 5. 삭제 <2013.9.13.>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③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2.22, 2013.3.23.> ④ 삭제 <2013.9.13.>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9.13.>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3.9.13.>.

115) 하정하, 같은 글 pp.25~29.

116) (1) 기록 생애 주기 전반에 대하여 기록의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취급·보호·처분에 관한 정책과 행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 (2) 한 기관이나 조직의 기록관리 책임자. 기록관리자의 활동에는 편철 및 보유 기간 관련 계획 수립, 기록관리 실무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의 확인, 기록을 위한 적절한 매체 검토, 현용·준현용 기록을 위한 보존 설비 설치 계획의 수립, 스캐닝 및 마이크로필름 촬영 감독, 필수 기록(vital record)의 확인 및 관

에만 한정하고 있다. 영구 혹은 준영구 기록물의 활용을 위한 연구 활동은 역사가들의 역할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대해 아직 기록관리 시스템이 자리 잡기에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고, 이에 현용/준현용 기록물을 관리하는 인력의 배치도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중국의 경우는 기록물관리 기본 법령이 제정되기도 전에 가치 있는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공개 활용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아키비스트가 기록물 편연(編研)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서는 꾸준히 훈련을 해왔고 또 기록물관리 기관에서는 편연의 성과물들을 쏟아냈다. 이는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가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인식의 차이, 즉 기록물을 그저 행정의 산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대중들이 알아야 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가, 그리고 그것을 누가 대중들이나 연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두 나라에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다.

인식차이 외에도 또 다른 차이점이 존재한다. 앞의 1절에서 언급한대로 기록관리 제도를 도입하던 시기 각자 영향을 받은 국가가 다르다. 중국은 구 소련의 영향을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영향을 받아 기록물을 편찬하던 전통을 계승하여 편연을 중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편연이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배척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장점은 받아들이고 공개할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단점은 극복해야 할 것이다.

---

리 체계 수립 등이 포함된다.(Pearce-Moses(2005), p. 335) 기록관리자는 자기 기관의 일반 정책에 입각한 기록관리 정책과 업무 절차의 수립, 기록의 지적 통제 및 물리적 통제, 기록의 물리적 관리 환경 구축, 기록 보호, 기록 보유 기간 책정, 잠정적 보존 가치 평가, 기록 폐기 심의 및 집행, 보존 기록관으로의 기록 이관, 기관 내 기록관리 교육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기록관리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아키비스트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록학회 엮음, 『기록학 용어 사전』, pp.53~54.

## 5. 결론

이상에서 중국과 한국의 아키비스트가 기록물 공개의 적극성에서 차이가 생겨나게 된 배경과 실제 기록물 편연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한국이나 중국은 모두 기록물의 편연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은 현대 기록관리로 넘어오면서 그 중요성이 예전보다 감소하게 되었다. 두 국가 모두 행정의 효율성을 기치로 내걸며 기록물관리의 혁신을 꾀하였지만 중국은 기록물관리의 궁극적 목적인 기록물의 공개와 활용까지 추진하였고, 한국은 행정적 효율성 추구에서 멈췄다. 현대 국가로 들어서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 두 국가는 각자 다른 국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영향은 기록관리 방면에도 끼치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기록물을 편찬해오던 전통에서 더 나아가 편연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중국은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대중에게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키비스트의 역할임을 법률로 정하였다. 편연을 교육과정에도 포함시켜 관련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뿐만 아니라 주요 당안관 뿐만 아니라 기층 당안관에서도 기록물 편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중국은 기록물의 편연이라는 것을 아키비스트의 역할로 인지하고 그에 맞는 규정을 명문화 하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내의 기록관리 사정을 보면 이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국내의 기록물 편연의 실제 모습을 보면 아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는 기록정보 콘텐츠는 최근에 들어서 계속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이러한 성과물이 국가기록원 자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국가당안관 뿐만 아니라 지방의 기록물관리기관에서도 편연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만 전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실제 성과물에 있어서 그 양적 차이는 매우 크다.

둘째는 기록물의 편연 성과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해제집, 기술서집 등의 출판에 있어서도 외부의 인사들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 기록물의 편연을 아키비스트의 영역이라고 여기지 않아 교육 기관에서 편연관련 교육을 소홀히 하여 역량 있는 아키비스트를 양성하지 못하였다. 국내 기록물관리 환경에서는 기록물의 활용 보다 현용기록물관리를 더욱 중요시 여기게 되면서 레코드 매니저(record manager)로서의 교육에 집중하여 나오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록물의 편연은 기록물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며 대중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아키비스트가 아니라 먼저 소장 기록물을 알리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아키비스트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이에 한국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이 기록물의 편연에 더욱 적극적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편연 관련 소양을 갖춘 아키비스트를 양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에서도 기록물관리기관과 아키비스트의 임무로 기록물의 편연을 규정하여 기록물관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편연의 제도화 과정에서는 중국에서 편연이 당 선전의 도구가 되었던 과거처럼 국내에서 정부 홍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그 이하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에서도 기록물의 편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펴내던 사관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행하였을 것이다. 지금의 아키비스트는 현대의 사관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사관들의 사명감과 함께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록을 수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기록물 활용에 힘써야 한다.

## 참고문헌

### 1. 법제 및 표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 대한민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6.11.] [대통령령 제 25375호, 2014.6.11., 타법개정], 안전행정부. 대한민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9.13.] [안전행정부령 제16호, 2013.9.13., 일부개정], 안전행정부. 대한민국.

「국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 2011.4.20.] [국회규칙 제164호, 2011.4.20., 전부개정], 국회도서관.

「법원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 2014.1.1.] [대법원규칙 제2512호, 2013.12.31., 타법개정],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 2012.12.11.] [헌법재판소규칙 제301호, 2012.12.11.,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 2014.3.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9호, 2014.3.21.,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당안법(中華人民共和國檔案法)」

「중화인민공화국당안법실시관법(中華人民共和國檔案法實施辦法)」

「당안관업무통칙(檔案館工作通則)」

「기관 당안 관리 업무제정(건설)규범(機關檔案工作業務建設規範)」

NAK/S 4:2012(v2.1)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v2.1) 2012.

ISO 15489 정보와 도큐멘테이션: 기록관리 Part 1.

### 2. 단행본

국가기록원, 『2007 기록관리 혁신포럼, 참여와 시스템에 의한 기록관리 혁신』, 2007.

- \_\_\_\_\_, 『국가기록원 발간도서 · 온라인콘텐츠 가이드북』, e-work, 2011.
- \_\_\_\_\_, 『기록관리실무시리즈 제1권 기록관리개론』, 2011.
- 김상호, 『기록보존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9.
- 김정하, 『기록물관리학 개론』, 서울: 아카넷, 2007.
- 덩샤오싱·천즈웨이 주편, 『당안관리학 개론: 중국의 현대 기록관리학』 정문상 옮김, 서울: 해안, 2003.
- 메리 조 푸/설문원 역, 『기록정보서비스』, 서울: 진리탐구, 2004.
- 박지태, 『기록관리법령 따라 읽기』, 서울: 선인, 2008.
- 시어도어 쉘렌버그/이원영 옮김, 『현대기록학개론』, 서울: 진리탐구, 2002.
- 양태진, 『기록보존학개론』, 서울: 법경출판사, 1993.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백서7)』, 2005.
- 제임스 오 톨/이승억 역, 『기록의 이해』, 서울: 진리탐구, 2004.
- 최정태, 『기록학개론』, 성남:아세아문화사, 2006.
- 캐롤라인 윌리엄스/남태우, 김유승 역, 『기록관리학의 이해』, 대구: 태일사, 2008.
- 한국기록관리학회,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성남: 아세아문화사, 2013
-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2008.
- 한미경, 노영희, 『기록 및 기록관리의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1.
- Mary Jo Pugh,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AA, 2005.
- Richard Pearce-Moses,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Archival Fundamentals SeriesII』, Chicago:SAA, 2005.
- Jenkinson. H, 『A Manual of Archival Administration』, Oxford Press, 1992.

- 曹喜琛, 『檔案研究概論』, 北京: 檔案出版社, 1994.
- 陳智爲, 鄧紹興, 劉越男 編著, 『檔案管理學 第三版』,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8.
- 北京檔案館 編, 『北京檔案使料』, 2009年 4期, 北京: 神華出版社.
- \_\_\_\_\_, 『北京檔案使料』, 2010年 2期, 北京: 神華出版社.
- \_\_\_\_\_, 『北京檔案使料』, 2012年 1期, 北京: 神華出版社.
- \_\_\_\_\_, 『北京檔案使料』, 2013年 1期, 北京: 神華出版社.
- \_\_\_\_\_, 『北京檔案使料\_北京山名名園』, 2013年 3期, 北京: 神華出版社.
- 中國檔案局 中央檔案館 編, 『中國檔案年鑒2010』,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12.

### 3. 국내논문

- 장대신, 박지영, 「중국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4권 제2호, 2004, pp.91~116.
- 김건, 김수정, 윤은하, 한희정,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 13권 제3호, 2013, 199~229.
- 김익한, 「기록학의 도입과 기록관리혁신(1999년 이후)」, 『기록학연구』 제 15호, 2007, pp.67~93.
- 김해인, 「기록 콘텐츠의 서비스 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2.
- 박성진, 「[서평] 기록학 연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양대진 편, 『기록보존학개론』, 김상호 지음, 『기록보존론』」, 『기록학연구』 제2호, 2000, pp.239~250.
- 서혜란, 「한국 공공기록관리 정책의 연대기적 검토」,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9권 제2호, 2009, pp.189~214.
- 설문원, 「기록정보서비스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국가기록원을



-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제25권 제3호, 2008, pp.249~271.
- \_\_\_\_\_, 「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과 과제」, 『기록인(IN)』, 제3호, 2008, pp.11~19.
- 심세현, 이성숙, 「기록물관리기관의 출판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제17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0, pp.163~170.
- 이영학, 「한국 기록관리의 사적 고찰과 그 특징」, 『기록학연구』 제34호, 2012, pp.221~250.
- 이원규, 「공공기록물의 수집·이관과 아키비스트의 역할」, 『기록학연구』 제2호, 2000, pp.3~48.
- 이상민, 「역사를 위하여: 아키비스트와 역사가의 역할」, 『기록학연구』 제6호, 2002, pp. 225~262.
- \_\_\_\_\_, 「ICA 아키비스트 윤리 규약」, 『기록보존』, 제12호, 1999.
- 이상훈, 「한국정부 수립 이후 행정체제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48년~64년)」, 『기록학연구』 제21호, 2009, 169~246.
- 이승휘, 「중국의 아키비스트 양성제도: 中國人民大學檔案學院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창간호, 2000, pp.189~218.
- 정연경, 「기록학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과 북미를 중심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1), 2003, pp.81~100.
- 정은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공공프로그램의 역할과 운영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제16호, 2007, pp.257~302.
- 최성락, 이해영, 「한국 행정학 교육의 변화: 행정학 개론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행정연구』 제19권 제4호, 2009, pp.163-185.
- 풍혜령(馮惠鈴), 「중국 당안학의 현황 및 발전추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1호, 2001, pp.37~52.
- 하정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한국 기록관리체계의 특징 및 개선방향 - 생애주기 및 연속체 이론의 시각에서」, 2005,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4. 국외논문

李丹, 「吳寶康檔案編研的利用思想演變研究」, 라오닝대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2.

邢永福, 「祝《北京檔案史料》創刊20周年的賀詞」 『北京檔案史料』 2006年 第2輯, 2006, pp.4~5.

陳陽風, 丁美化 「文獻檔案的整理出版原則」, 廣東財經職業學院學報 第2卷 第1期, 2003, p.85~86.

「『北京檔案史料』 2011年第2輯內容提要」, 『北京檔案』 2011年 6期, p.64.

「『北京檔案史料』 2013年第3輯『北京的名園名山』內容提要」, 『北京檔案』 年 10期, p.63.

翁梅, 「基層檔案室如何開展檔案編研工作」, 『浙江檔案』 2009年 第4期, pp.55~56.

徐光遠, 「檔案編研工作的內容和意義」, 『華章』, 2012年第23期, p.303.

#### 5. 홈페이지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나라기록포털 [<http://theme.archives.go.kr/next/theme/themeMain.do>].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http://newarchivist.cafe24.com/>].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http://record.mju.ac.kr/user/archives/index.action>].

중국런민대학 정보자원관리학원 [<http://www.irm.cn/>].

우한대학 정보관리학원 [<http://sim.whu.edu.cn/>].

난징대학 정보관리학원 [<http://im.nju.edu.cn/>].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당안국 [<http://www.saac.gov.cn/>].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

베이징시 당안정보망 [<http://www.bjma.gov.cn/>].

중국과교평가원(中國科教評價網) [<http://www.nseac.com/>].

## 6. 웹 게재자료

「‘기록보존’ 첫 개론서 눈길 정부기록보존소 과장 양태진씨 퍼내」, 『한겨레』, 1993. 12. 1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view.nhn?editNo=6&printCount=&publishDate=1993-12-01&officeId=00028&pageNo=13&printNo=1747&publishType=00010&articleId=&serviceStartYear=1920&serviceEndYear=1999> cited 2014.6.20.].

## Abstract

# A Study on the *Pyeon-yeon*(編研) as an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Yejin Yoon

Program in Archiv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records and archives is utilization and providing. In western archival science, the archivists provide records or archives by reader request. However, in China, archivists actively edit the archives and publish the book of archives. This dissertation discusses the '*Pyeon-yeon*(編研) system', which is distinctive archival management system in China. '*Pyeon-yeon*' is records information which is edited by archivists, one of reference services to provide the public with the records information actively, scientifically and systemically.

However, there are concerns that the records and archives could be intentionally edited by archivists. In reality, Chinese archives fundamentally limit to the disclosure of the *Dang-an*(檔案), thus the

access to the *Dang-an* is restricted. China's *Pyoen-yeon* can be viewed as making public records or archives to supplement restricted access of *Dang-an*, which makes available to the public. It should be reminded the disadvantage of the *Pyoen-yeon* and would be introduced the *Pyoen-yeon* in the country in a positive direction. Because *Pyoen-yeon* is an assertive activity of archivists to provide records and archives to the public.

This study distinguishes archival science introductions, curriculum and records management law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o look through how the *Pyoen-yeon* is recognized.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Pyoen-yeon* in 'Beijing Municipal Archives' and 'National Archives of Korea' are compared. The comparison shows that enormous differences exist in the two countries.

In China, the *Pyoen-yeon* is believed to come from the tradition of compiling records. The tradition of compiling records was transformed into a new form under socialism being effected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In Korea, there had been traditional archive management system as China but disappeared being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effected by the US. The *Pyoen-yeon* should be introduced in the country in order to inform the public of worthwhile records and archives and share with those values. The *Pyoen-ye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nd adopted an education courses. The archivists trained with the *Pyoen-yeon* should be placed central records management agency as well as the local permanent records management agency and each public institutions.

**Keywords** :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use of archives, *Dang-an*, *Pyoen-yeon*, *Bianyan*, roll of archivists

**Student Number** : 2011-23121